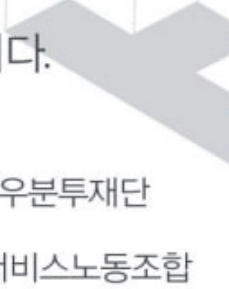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한국의 금융 불평등

초대합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창립 4주년을 맞아  
한국의 금융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여  
금융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정**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추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1부 인사말 / 축사

사회 : 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인사말]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축 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부 토론회

좌장 :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발제] 한국의 불평등 - 금융과 부채를 중심으로  
신광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우분투연구회장

[토론] 한국 경제와 금융 불평등  
\_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민과 금융부채  
\_ 이호준 서민금융진흥원 노동이사  
청년과 금융 불평등  
\_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금융 불평등의 현실과 노동조합  
\_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  
정부 정책  
\_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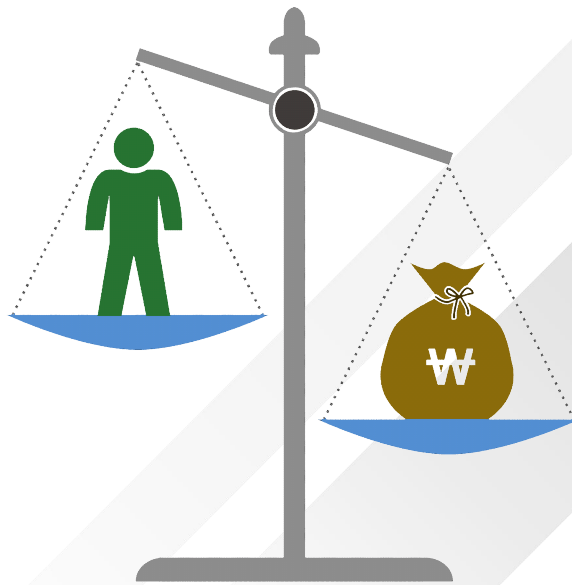
[종합토론]

문의전화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02-6382-3427-8





# ‘한국의 금융 불평등’



- 일시: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주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 ■ ■ ■ 프 로 그 램 ■ ■ ■ —

### 1부\_ 인사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2부\_ 토론회

- 좌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 발 제

“한국의 불평등 - 금융과 부채를 중심으로”

신 광 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우분투연구회장)

#### ■ 토 론

- |                   |                        |
|-------------------|------------------------|
| ① 경제와 금융불평등       | 이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 ② 한국서민과 금융부채      | 이효준 (서민금융진흥원 노동이사)     |
| ③ 청년과 금융불평등       |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
| ④ 금융불평등의 현실과 노동조합 |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    |
| ⑤ 정부 정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 ■ 종합 토론

# 《《 인사 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 인사 말 /

박 용 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정책세미나 <한국의 금융 불평등>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불평등은 시대적 화두이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금융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자산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이미 토마 피케티 등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쉬워질수록, 그리고 그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금융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재기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파산지원, 신용불량자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채 지속된다면 그 사회는 성장은커녕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보고서에서는 금융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소로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를 언급합니다. 금융 자체 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결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금융이 밀접해지는 만큼 금융 정책을 다루는 관점도 우리 삶의 궤적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위원회에 있으면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의 불평등이 실물경제와 시장질서에서, 또 자산축적의 과정에서 얼마나 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경험과 생각들이 함께 논의되고 더 나은 금융정책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 불평등을 주제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해주신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님과 소중한 의견을 주실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저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

신 필 균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에서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 지적은 꽤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함과 아울러 한국의 불평등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 역시 주목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럽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낳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은 가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구나 현행 제도하에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증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금융자산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 외는 역으로 현행 금융제도는 또 다른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조건 즉 금리나 수수료의 불평등은 물론 가장 심각한 것은 금융 배제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고리사채에 의존하거나, 다중채무자, 사회적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곤 합니다. 20대 가구의 경우 금융 부채가 저축의 두 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나아가 불평등의 고착화 혹은 계급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파헤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 합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일차적으로 오늘날의 금융 불평등의 현주소를 명확히 하고자 이를 연구주제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 하는 여러 구조적 요인의 해명과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를 모색해 보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구를 위한 실증자료가 매우 미흡하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설사 정보가 있더라도 공개와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박용진 의원실과 장혜영 의원실의 도움이 있어 자료수집과 연구의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맡아주신 모든 연구위원님, 특히 연구 총괄을 맡아주신 신광영 교수님을 비롯하여 김상봉(한성대학교), 정준호 교수님(강원대학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획에 참여해주신 우분투연구회의 여러분들과 이창곤 우분투재단 이사 겸 연구위원장의 열정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계속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 말 /

이 재 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는 1998년 외환위기 전후에 태어나 학창시절인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소득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성장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고, 과잉팽창된 금융의 거품이 급격히 빠지면서 수많은 가정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세대는 취업의 문턱에서, 결혼의 갈림길에서, 출산과업에 이르기까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불평등을 야기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금융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부의 불평등이 어떻게 심화되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세기 동안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으며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보다 자본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다고 입증한 바 있습니다. 즉,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다면 불평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오로지 부자들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이윤추구에만 매달려왔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을 대형화하는 사이에 정작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소득과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노동이라는 연료가 주입되지 않은 엔진은 과열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포용적 금융이 뒷받침해주는 나라입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할 때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소득이 늘어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올라가면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거꾸로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청년세대의 좌절을 금융불평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한국의 금융 불평등을 다룬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금융노조는 재단과 함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 발 제 문 》》

## 한국의 불평등 - 금융과 부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공동연구원: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 한국의 불평등

## - 금융과 부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공동연구원: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목차] .....

서문

1장 금융화와 금융 불평등

2장. 금융 불평등과 다극화

3장. 소득계층과 금융부채

4장. 금융 불평등의 추세와 자산 기반 한국 금융시스템

5장. 결론 및 제언

## 서 문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불평등의 실태를 탐색적으로 다룬다.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도 금융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의해서 개인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한국의 금융 불평등을 다룬다.

오늘날 금융은 모든 일상생활의 토대가 되었다. 과거 금융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들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저축을 전담하는 은행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금융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은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은 일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이제 주식, 은행 대출, 신용카드는 거의 모든 성인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생활수단이 되었다. 21세기 들어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대상으로 금융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이 금융의 역할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가구 은행 대출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지금까지 금융 불평등은 불평등 논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모든 경제 행위가 금융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금융 불평등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21세기 들어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 불평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은 더 이상 주변적인 주제가 아니라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매개하는 중요한 제도의 핵심을 이룬다.

이 보고서는 금융 불평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를 탐색적으로 다룬다. 금융 자산은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금융 자산이 없는 경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이다. 소득이 낮은 빈곤층에게 빈곤이 더욱더 가중되는 현실을 야기한다. 신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시장에서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금융 접근성은 부채를 통해서 부의 축적 기회를 확대시킨다든지 혹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부채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얻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부채의 역설’이 존재한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고,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채 상환 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부채를 이용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부채 상환 능력을 대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채 상환 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은 제2 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사채를 이용하기도 한다.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시기는 부채 상환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출이 폭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까지 대출이 확대되었다. 특히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하여 아파트를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을 매입하는 청년들도 나타났다. 그 결과 새롭게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금융 불평등을 다룬다. 아직 금융 불평등과 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불평등 실태 파악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어진 이슈들은 추후 더 다양한 자료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지원해 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보고서에 여러 가지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주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 제1장 금융화와 금융 불평등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변화는 금융화(financialization)이다. 금융화는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이 금융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회변화를 의미한다. 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생산과 거래도 금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금융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활동도 금융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에 기반한 경제활동



이 날로 더 중요해지고, 금융 엘리트가 국가정책이나 기업경영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게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Epstein, 2005). 이러한 변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조업 불황보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더욱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 직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았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침체와 유동성 급증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그 결과는 한국 사회는 경제 불평등, 빈곤 심화, 고용 위축, 노인 빈곤 지속, 저출산 추세 심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를 경험하고 있다. 유기적 위기는 위기가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를 바탕으로 하고 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마땅한 정책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 영역의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정치, 노동, 교육과 복지 등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주요 행위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보다 경제 수준은 훨씬 높아졌지만, 일상적인 국민의 삶은 더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과 갈등은 더 심해지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금융은 모두에게 균등한 삶의 편리함과 기회의 영역이 아니다. 금융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금융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진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금융부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나라들이 화폐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실물경제의 위기하에서도 금융시장은 호황을 보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거대한 거품이 발생하였다. 실물경제의 침체 속에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품경제가 형성되었다.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이용하여 주식과 부동산 시장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대출을 통한 투기”가 횡행하였다.

〈표 1-1〉은 2018년 말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대출 잔액 추이를 보여준다. 개인 총부채 잔액은 2019년 말부터 2년 반 사이인 2021년 6월 말 사이에 246조 증가하였다. 총부채 증가는 주로 신용대출에 따른 부채 증가로 2019년 303조에서 2022년 6월 말 372조로 69조 증가하여 22.8%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담보대출액 증가는 37조 증가하여 증가율은 6.7%였다. 그러나 기간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시기에 많이 이루어져서 주로 2020년 말과 2021년 말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신용대출 증가는 그보다 빠른 시기인 2019년 말과 2020년 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모두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하락이 낮아지는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이후라는 점에서 저금리가 대출 급증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대출 종류와 연도별 부채 잔액 현황 (2018-2022.6)

(단위: 조원, %)

구 분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6월말
총부채잔액 <sup>1)</sup>	1,567조	1,626조	1,755조	1,872조	1,876조
주택담보대출잔액 <sup>2)</sup>	701조	684조	689조	722조	730조
신용대출잔액 <sup>3)</sup>	279조	303조	356조	377조	372조
보험계약대출잔액 <sup>4)</sup>	-	0.01조	0.17조	0.58조	0.86조
평균대출이자율 <sup>5)</sup>	9.19%	8.56%	7.86%	7.56%	7.72%

1) 각 시점별 개인대출 및 카드대출 총 등록금액

2) 개인대출정보 중 주택담보대출 등록금액

3) 개인대출정보 중 신용대출 등록금액

4) 개인대출정보 중 보험계약대출\* 등록금액

\* '19.8월에 신규 신설되어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19년 말부터 통계 산출 가능

5) 각 시점별 DSR 산정대상 대출 보유자의 평균금리

자료: 신용정보원(2022.8.11.) 박용진 위원실 제출자료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시중에 유동성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속히 인하되었다. 기준금리는 2019년 10월 1.25%에서 2020년 3월 0.75%로 인하되었고, 또 다시 2020년 5월부터 0.5%로 더 낮아져서 2021년 8월까지 유지되었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곧바로 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금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 버블이 만들어졌다. 풀린 돈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단기적인 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적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침체를 겪은 실물경제와는 대조적으로 금융시장은 투기적인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대출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이 시기 주택담보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연령과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 동안 대출 증가는 30대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졌다. 2019년 말부터 21년 말까지 30대가 38.9조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였다. 그 다음이 40대로 21.6조, 20대가 18.2조, 60대 17.3조, 50대 9.5조 순으로 연령대 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청년 세대 대출이 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다른 영끌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와 20대 이하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나이가 적은 세대에서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무려 2.28배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가 이루어졌다.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이들에서 폭발적인 대출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영끌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표 1-2〉 연령대별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 현황(은행권)

(단위: 조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6월말
부동산 관련 대출 <sup>1)</sup>	20대이하	19.4	26	37.6	44.2	45.1
	30대	144.7	153.3	174.6	192.2	193.9
	40대	192.2	199.3	210.7	221.9	224.5
	50대	155.1	160.8	164.9	170.3	170.4
	60대이상	94.3	101.8	110	119.1	121.5

1)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록금액  
 자료: 한국은행(2023), 연령대별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은행권)

거시적인 대출 추세는 금융시장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금융시장 불평등을 보여주는 못하는 못한다. 거시적인 추이를 통해서도 어떤 사회계층이나 계층 혹은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또한 대출과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도 이질적이어서 고소득 전문직 청년이 있는가 하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저소득 비정규직 청년도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대출은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과 소득 차이가 청년 내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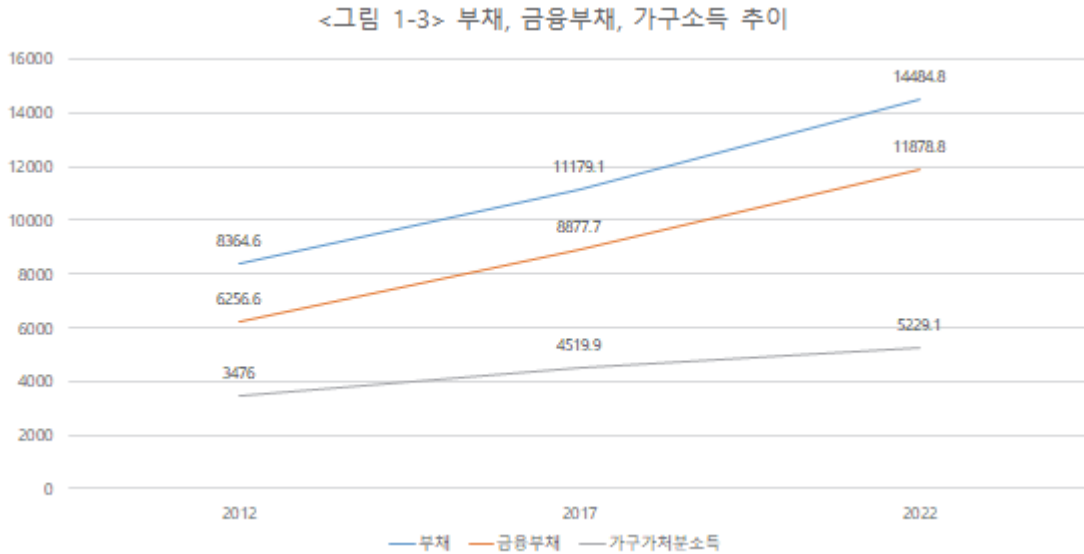
오늘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대부분 가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경제 행위가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를 가지고 있다. 부채 중에서 금융권 부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금융이 많은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표1-3〉은 통계청에서 수집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가구 대출 형태 비중을 보여준다. 전에 비해서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약간 줄어들었

지만, 2022년 60% 이상의 가구가 여전히 부채를 안고 있다. 그리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 중에서 절대 다수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8.88%, 2017년 56.78%, 2022년 57.26%). 대출 유형 가운데서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동시에 여러 가지 대출을 한 다중대출 가구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여서 2012년 10.88%에서 2017년 11.07%로 그리고 2022년에는 12.4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표 1-3〉 한국의 가구 대출 유형 분포 (2022년)

가구 대출 유형	비율(%)		
	2012	2017	2022
가구 부채 없음	34.85	36.50	36.70
비금융권 부채	6.27	6.72	6.04
금융권 담보대출	24.18	27.40	26.39
금융권 신용대출	12.51	9.70	10.62
금융권 담보대출 + 신용대출	10.88	11.07	12.40
기타 대출	11.32	8.61	7.85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절대적인 대출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세 시기(2012년, 2017년과 2022년)를 비교 하면, 대출자 1인당 부채액은 2012년 8,364.6만 원, 2017년 11,179.1만 원, 2022년 14,484.8만 원으로 대단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7.3%로 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다. 이 중에서 금융권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서, 2012년 6526.5만 원에서 2017년 8877.7만 원 2022년 11878.8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8.2%로 나타나 연평균 소득증가율 5.9%를 크게 웃돌았다. 〈그림 1-3〉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 금융부채와 가구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보여준다. 부채와 가처분 소득 간의 격차가 2012년 4,888.6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255.7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부채와 소득 간의 격차는 더 확대되어 2012년 2022년 사이 2,780.6만 원에서 6,649.7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 사이에 2001.1만 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부채 증가분 2,621.1만 원보다 적었다. 이는 과도한 금융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대출이 둔화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제2장 금융불평등과 다극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에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주로 소득 불평등이 많은 주제로 다루어졌고, 일부 자산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였다. 양극화 연구는 중산층의 몰락(disappearing middle class)과 함께 시작되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때까지 극심한 불평등을 겪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 사회의 방향이 바뀌었다. 즉, 1920~1950년대에 부유층과 노동자계급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었고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격차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중산층 중심의 사회는 1970년대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양극화나 극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불평등과 금융극화를 다룬다. 첫째, 본 연구는 2017년~2021년 사이의 금융불평등과 금융극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과 순자산불평등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부채불평등을 살펴

본다.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부채가 있지만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순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살펴본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금융회사들은 신용점수나 신용등급만 가지고 금융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는 금융회사 행태와 관련이 있다. 셋째, 직업별 금융불평등과 금융극화에 대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본다.

## 2. 불평등과 극화의 의미

불평등 연구는 18세기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의 관점에서 논쟁 시작되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주로 소득불평등이 많은 주제로 다루어졌고, 일부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양극화 연구는 중산층의 몰락(disappearing middle class)과 함께 시작되었다. 1929년 대공황 때까지 극심한 불평등을 겪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 사회의 방향은 바뀌었다. 1920~1950년대에 부유층과 노동자계급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었고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차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중산층 중심의 사회는 1970년대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부터 양극화나 극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불평등도(inequality)는 빈곤(poverty)이나 후생(welfare)의 개념과 반드시 같지 않다. 소득불평등도는 소득 전체의 분포를 정의하기 때문에 빈곤율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즉, 소득분포의 하위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나 상위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후생과 소득불평등은 전체 분포에 초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소득불평등도는 분포의 퍼짐(dispersion)이나 분산만을 고려하지만, 후생은 분포의 퍼짐과 동시에 평균도 고려한다. 이러한 불평등도, 빈곤, 후생의 개념은 서로 연관된다.

극화는 불평등과 개념이 약간 다르다. 사회의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두 배로 증가한다면 상대적 불평등도는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지니계수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등을 활용하였으나, 소득불평등의 추세나 원인 분석을 하였고 분포의 변동 등으로 연구들이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중산층의 몰락(disappearing middle class)이라는 시대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포함하는 극화(polarization)는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3. 주요 결과

여기서 우리는 자료의 일관성을 고려해 2017년~2021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상소득(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그리고 부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만연령, 순자산, 자산, 부채, 정상소득(소득)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부채 중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관련 대출이 가장 높다. 셋째, 변수별 전년대비증감에서 순자산, 자산, 부채의 증감의 원인은 주택 등의 부동산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2021년 4년간 연평균증가률을 보면, 신용대출, 순자산, 자산 순서로 매우 크고, 담보대출, 부채, 정상소득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주요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8년에 부채, 순자산,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 2021년에 순자산, 자산,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부채, 자산, 순자산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 분석 중, 분위배율과 배율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분위배율 추정결과, 정상소득 10분위배율은 2018년~2020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소득분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순자산의 10분위배율은 소득보다 매우 크며, 계속하여 증가하여 순자산분배는 악화되었고, 자산의 10분위배율도 소득보다 크지만 순자산보다 작게 나타나며, 2020년을 제외하고 악화되었다.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10분위배율은 2017년~2021년에 산출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 연도별로 증감을 비교할 수 없으나 이미 매우 불평등한 상태로 나타난다. 배율 추정결과, 소득배율은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 이후 증가하였고, 순자산배율은 2018년에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였으며, 자산배율은 2018년 감소, 2019년 증가, 2020년 증가, 2021년 감소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배율은 모든 기간 동안에 0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담보대출금액과 신용대출금액 모두 하위 75%(상위 25%) 정도에서 값이 나타난다. 대출이 있는 경우의 담보대출금액의 하한선이 신용대출금액의 하한보다 낮은 이유는 담보가 신용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출할 의도가 아예 없거나, 담보가 있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다 상위 분위로 이동하게 된다.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담보대출금액은 상위 35%가 받고 있으며, 신용대출금액은 상위 20% 정도만이 받고 있다. 따라서 금리가 낮은 시기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정책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에 대해 신용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담

보물건의 가격변화에 대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더한 금액을 전체대출로 보고, 주택가격의 경기변동에 따른 2사이클을 계산하여 담보가액을 설정할 수 있다. 차주의 신용상태는 배제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담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용대출의 기본이 되는 신용등급을 산출할 경우에 주택보유여부를 빼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변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분석 중, 상대적 지니계수 추정 및 분해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지니계수에 따른 불평등 정도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 순자산, 자산, 경상소득 순으로 나타난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의 지니계수는 0.70이상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대비 2021년 상대적 지니계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순자산, 자산, 소득 순서로 나타나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는 이미 매우 불평등하다. 상대적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대출, 신용대출, 경상소득의 집중도 지수가 지니계수보다 크고, 전체불평등도지수(자산에 가까움)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불평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상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의 직업별로 불평등도가 다르다. 집단 내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직업별로 인구 집단을 구분했을 때 집단 내 불평등도는 전체 변수별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단 간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직업 집단 간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순자산, 경상소득의 불평등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업과 직장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첩 또는 나머지 요인은 상당히 크며, 우리나라의 가구주의 다른 특성인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직업별로 살펴보면, 경상소득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으로는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에 대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순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으로는 군인,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에 대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에 비해 부채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직업으로는 군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에 대해 부채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GR모형을 활용한 금융극화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극화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의 순서로 매우 크며, 순자산, 자산, 소득 순서로 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상대적 지니계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채, 순자산, 자산, 소득 순서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순서와도 일치한다. 2017년대비 2021년 증감률을 보면 순자산, 자산,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지니계수의 증감률보다 크게 나타나 양극화의 정도가 커졌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는 보다 작아졌으나 자산의 양극화는 커졌다. 다극화(3개)의 경우에 2017년대비 2021년의 증감률은 지니계수의 증감률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DER모형을 활용한 금융극화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R 극화지수의 크기는 부채가 매우 크며, 자산, 순자산, 소득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극화의 원천별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자산 이질성 정도는 높아졌지만 동질성 정도가 낮아져 순자산의 양극화지수는 2017년보다 2021년에 증가하였다. 담보대출의 양극화지수는 같은 기간에 감소하였다. 신용대출의 양극화지수는 증가하였고, 경상소득의 양극화지수는 이질성의 정도와 동질성의 정도가 모두 낮아져 감소하였다. 둘째, 이러한 양극화지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순자산이 매우 크고, 담보대출, 경상소득, 신용대출 순서로 나타난다. 셋째, 인구 하위집단인 직업별로 전체 양극화를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전체적으로, 집단내 요소보다 집단간 요소의 상대적 기여도가 훨씬 크며 이질성이 동질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의 인구비중이나 변수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극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간 극화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 소득이 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단간 순극화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평등, 빈곤 및 극화에 대한 집단내 격차를 감소시킬만한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Inaki모형을 활용한 사회적 극화지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으로 구분한 사회적 극화지수 부채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경상소득, 자산, 순자산 순서로 크게 나타난다. 경상소득의 사회적 극화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의 사회적 극화지수는 2017년을 제외하고 증가하였고, 자산과 순자산의 극화지수는 2019년 이후에 감소하였다. 사회적 극화지수의 직업별로 분해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간 요소가 집단내 요소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부채의 이질성과 동질성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직업별 이질성이 동질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 4. 향후 연구과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대별 등 금융불평등과 금융극화에 대해 세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각종 시계열 모형이나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금융불평등과 금융극화 변수간에 영향력이 주택가격, 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3장 소득계층과 금융부채

#### 1. 서론

현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오늘날 부채를 장려하고 대출을 조장하는 다양한 금융 제도를 통해서 부채는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10년 155%로 증가했고, 2022년 211%로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 불평등은 소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불평등”과 금융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의 불평등” 두 가지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불평등은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한 금융 자산 규모의 격차를 의미하며,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로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금융 자산의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금융 이용의 불평등은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금융 접근성은 정부의 금융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이 금융 이용의 불평등을 촉진시켜 경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상호강화 경향을 보인다.

## 2. 부채의 성격과 부채 불평등

현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외상 거래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먼저 거래를 하고, 이후에 값을 지불하는 거래 형태라는 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부채를 기반으로 한 경제 행위이다.

둘째, 부채는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고 현재 부족한 자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하여 조달하는 레버리지(leverage) 역할을 한다. 개인 대출이나 국가 차원의 외채는 레버리지 역할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는 주로 중산층 이상의 사회계층에 해당된다.

셋째, 부채는 채무자가 대부기관이나 대부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행위의 결과이다.

부채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보다 더 심한 수준을 보이고,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부채 불평등은 부채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하다. 코로나-19로 가처분 소득, 자산, 부채, 금융부채 전 영역에서 2022년 지니계수가 2021년 지니계수보다 더 커져서 전반적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를 보였다.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처분 소득 최하위 5%에서 높았지만, 5~10% 분위에서는 낮아졌다가 점차 다시 증가하여 30~35% 분위부터는 절반을 넘고 있다. 50% 분위 이상에서 부채 가구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았다. 부채 비율은 최상위 소득 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최상위 5% 가구 중 부채 가구의 비율은 2020년 77.27%, 2021년 78.1%, 2022년 79.2%로 늘어났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부채를 통한 자원의 활용에 더 적극적이었다.

## 3. 금융부채

금융부채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 최하위 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졌고, 부채 규모도 커졌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 하위층의 금융부채는 줄었지만,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금융부채는 증가하였다. 금융부채 규모는 최하위 5%와 최상위 5%에서 가장 컸다. 최하위 5%의 금융부채는 최하위 소득계층이 되기 전에 대출을 받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진 경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처분 소득 최하위 5%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총대출 부채 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도 매우 높아서 연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반면, 최상위 5%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고 금융 부채 규모도 크지만, DSR 비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크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DSR 비율이 높아졌다.

대출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대출의 목적은 주로 주택 마련이었다. 20대 대출은 가장 낮은 편이었고, 대출의 목적은 주로 전월세 관련이었다. 이것은 생애과정 단계에 따라서 대출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과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외 부동산 구입 용도가 가장 컸다.

DTI로 측정한 대출 위험 집단(0.4 이상)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대출 위험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중 매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끌족”이라는 용어는 주로 30대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20대는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위험 수준의 대출 위험을 보여서, 30대와는 대단히 다른 양상을 보여 “영끌족”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소득수준별로 대출 위험집단을 살펴보면, DTI 지수가 위험 수준인 0.4를 넘는 가계는 소득 하위 40%에 집중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낮아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다. 이것은 기존 신용평가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더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대 금융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대출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출의 역설은 신용평가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체비율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 4. 음의 소득과 부채

소득은 크게 저소득, 중간 소득, 고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이 마이너스(-)인 음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소득은 저소득과 달리,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소득수준이다. 2022년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의 비율은 음의 소득 가구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 중 19.5%에 이르렀다.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율은

2021년 0.37%와 2022년 5.1%로 약 8만~1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음의 소득 가구 중에서 DTI 비율이 0.6을 넘는 고위험 가구는 21%로 약 4.5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소득이 없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가구라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가구라고 볼 수 있다.

## 5. 맺음말

금융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은 먼저 부채가 레버리지인 계층, 부채가 상환에 부담이 되는 계층과 신용 빈곤으로 인하여 부채를 얻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부채율이 낮고, 부채 액수도 작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변형시킨 메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조크레딧 제도는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세대 간에도 부채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20대는 주로 전월세가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30대와 40대의 경우는 내집 마련이 주된 부채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거 안정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 불평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각지대는 음의 소득 가구이다.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가구는 가구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가구이다. 저소득 가구와 구분하여 음의 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마이너스 소득 가구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음의 소득 가구는 기존의 금융 제도를 활용하여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제4장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부담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및 부채상환 부담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1. 서론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비 증가에 의한 내수 확대를 제약하는 하나의 제약 요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 가격상승과 연동되고, 이러한 자산 가격상승은 다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을 일으켜 경제 전반의 금융불안정성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 금융이 제도적으로 자유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신용의 가용성이 높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 기업금융 위주의 금융시스템과 다른 방향으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작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정부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초저금리의 상황을 겪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특히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상승의 결합이 이루어져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를 진정하기 위해 초단시간 내에 기준 금리를 전격적으로 급격히 올림으로써 그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도 국내 인플레이 진정과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이탈 방지와 환율 안정을 위해 미 연준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2010~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부채가 가계의 순자산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순자산 지니계수를 요인 분해하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순자산의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방법을 이용하였다. 둘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의 주관적 부담 정도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가계부채 위험 정도가 가구주의 주관적인 부채상환 부담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했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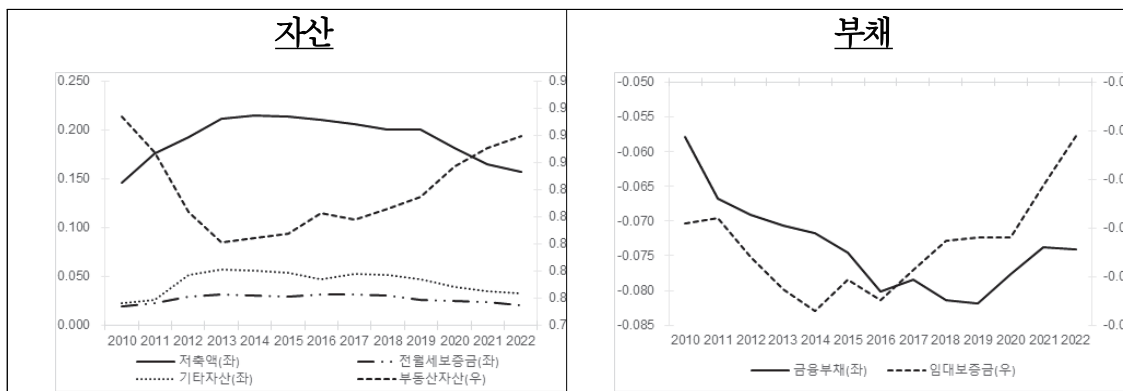
## 2. 분석 결과 요약

### 1)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에서 가계부채 항목의 역할

순자산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에 따르면,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 항목이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지니계수로 측정된 순자산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했다. 그림자 금융을 대표하는 임대보증금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순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였고, 금융부채는 2019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순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반전되었다.

순자산이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가감한 것이고, 순자산 지니계수 요인 분해는 순자산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순자산의 불평등에 기여한 바를 계산하는데, 각 항목을 요인 분해한 값을 더하면 순자산 지니계수가 된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가감한 것이 순자산이므로 부채 항목은 부(-)로 요인 분해되고, 순자산 지니계수에 기여한 바는 부(-)이다. 하지만 부채의 부(-)의 절댓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순자산 불평등의 완화가 악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된 2010년대 중·후반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림 4-1〉 자산과 부채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100, %)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따라서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부채는 자산 불평등 심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부동산경기가 불인 상황에서 임대보증금과 금융부채 모두 순자산 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항목이 자산시장 변동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금융부채가 가구의 순자산 격차를 줄

이기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난 정부 시기의 부동산가격 급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한 부채주도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은 근로(사업)소득, 부채조달, 상속과 증여, 그리고 자산처분 등으로 구성되는데, 초저금리 상황에서 값싼 부채조달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며, 이것이 부동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는 부채조달에 따른 원리금 상황에 큰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 2) 가계부채 현황: 가처분소득분위별 가계부채의 건전성 정도와 용도를 중심으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가구 대비 약 2/3 정도에 거의 육박하는 상당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여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2010년대 후반 이후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 2010~2022년 기간에 가처분소득 1분위는 35~40%, 2분위는 55.6~63.5%, 3분위는 65.9~73.8%, 4분위는 69.6~77.5%, 5분위는 72.9~80.0% 내에서 부채 가구 보유의 비중이 변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석 단위는 가구이고, 만약에 개인 단위로 분석할 경우 부채 보유 개인이 줄어들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미미하게 줄어들었지만, 2/3 정도의 상당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

다중채무 가구 비중은 2010년대 후반 이전에는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늘어나 주택시장 경기와 대략 연동되어 있다.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가처분소득 5분위 > 4분위 > 3분위 > 2분위 > 1분위 순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1분위의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상위 5분위의 그것보다는 작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전자의 다중채무 가구 비중이 후자의 그것처럼 증가했다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한 2010년대 후반에 둘 이상의 부채를 짊어진 다중 채무가구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계에게 부채조달이 자산시장 및 금리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측정된 DSR(Debt Service Ratio) 지표로 본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위험 이상 등급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저위험 등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계부채 위험은 가처분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 높으며, 5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후자에서 추세적으로 중위험 등급 이상의 비율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반전하였다.

여기서 DSR의 위험 등급은 안정(20%)이하, 저위험(20~40%), 중위험(40~60%), 고위험



(60~100%), 초고위험(100% 이상) 등으로 구분했으며, 한국은행은 중위험 등급인 DSR 40% 이상을 과다부채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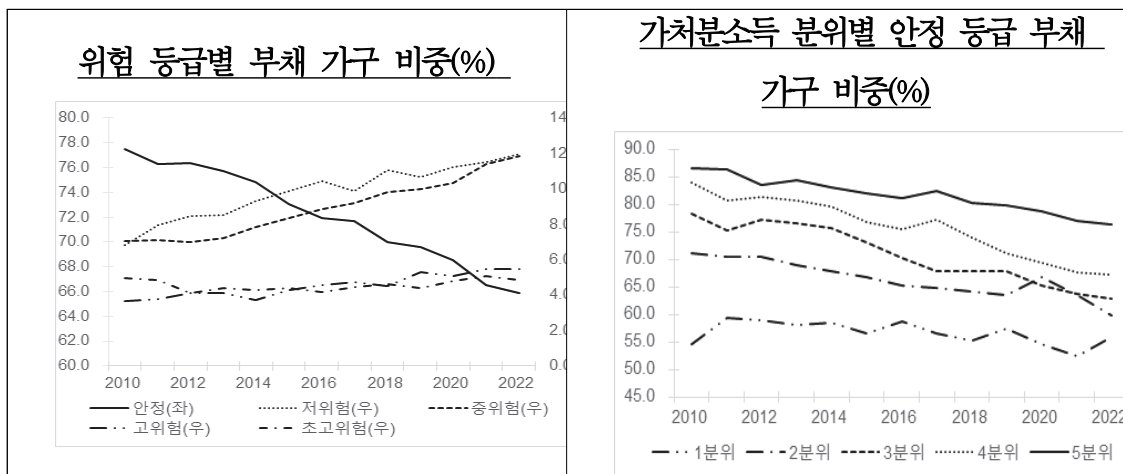
총자산대비 총부채액을 정의된 DTA(Debt to Asset) 지표로 본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는 저위험 등급 비중뿐만 아니라 중위험 등급 이상 비중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했지만, 최근에 반전했다. 안정 등급의 가계 비중이 매우 높아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단언할 수가 없지만, DSR처럼 저소득분위일수록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DTA 위험 등급은 안정(60%)이하, 저위험(60~80%), 중위험(80~100%), 고위험(100~200%), 초고위험(200% 이상) 등으로 구분했으며, 기존 연구는 70% 이상을 과다부채 가구로 규정하는데, 여기서는 중위험 등급인 80% 이상을 과다부채 가구로 규정하였다.

금융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LTI(Loan to Income) 지표로 본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DSR과 DTA와 달리 중위험 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가계부채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LTI 위험 등급은 안정(200%)이하, 저위험(200~300%), 중위험(300~500%), 고위험(500~800%), 초고위험(800% 이상) 등으로 구분했으며, 기존 연구는 대체로 중위험 등급 이상인 300% 이상을 과다부채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4-2〉 LTI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DSR과 DTA의 추이는 상반된 추세를 보여주었다. 전자는

역 U자형을, 반면에 후자는 U자형을 나타내고, 반면에 LTI는 계속해서 선형 증가했다. DTA와 DSR 지표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의 일시적 경감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둘은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이와 무관한 LTI 지표는 선형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DSR로 측정된 가계부채 위험 지표가 그 반대로 움직인 것은 변동금리의 원리금 상환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출 대기업의 호조로 인한 중상층 가구의 지속적인 근로소득 증가, 초저금리 상황이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했을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의 거치식 상환방식이 주종을 이루어 고정금리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방식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규정한 DTA 100%, DSR 40% 이상 가구인 위험 가구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매우 미미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보건 위기 시기에는 하락하였다. 이는 DTA와 DSR 지수가 자산시장 붐과 금리 변동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DSR, DTA, LTI 지수 중 어느 하나가 중위험 등급 이상 가구를 과다채무 가구로 규정하면, 그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량지표인 DSR과 저량지표인 DTA의 결합 분포를 보면, DSR 측면에서 중위험 등급 이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감지되지만, DTA 측면에서는 안정 등급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중위험(DSR)-안정(DTA) 등급 쌍이 2010년과 2022년 모두 84%로 높다. 이처럼 유량 지표 수준은 과다부채 가구이지만, 저량 기준으로는 과다부채 가구가 아닌 쌍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이용한 자산시장 투자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대출이 원활한 소득상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시장 붐이 꺼지면 자산 가격 하락으로 DTA 지표로 상승하고, 부채상환 압력이 가중되어 가계부채 위험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

가계부채의 용도를 보면,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이외 부동산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 용도 비중이 제일 높으며, 가처분소득별로 보면 대출 용도가 분위별로 상이하지만, 저분위일수록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이 꽤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2010~2022년 기간에 부채 보유 가구의 전체 부채액에서 거주주택구입, 거주주택이외부동산구입, 전월세보증금마련 등 부동산 구입과 임대차 관련 용도로 사용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8~55.8% 내에서 변동했다. 거주주택이외부동산구입 용도 비중은

2012~2012년 사이에 10.9%에서 1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거주주택구입 용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다소 줄어들어 횡보 하기도 했다. 이는 거주주택구입 용도 이외의 부동산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마련 용도 비중은 동 기간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승하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 사업자금 마련 용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부채상환 용도 비중은 대체로 횡보하고 있으며,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도 서서히 201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다시 미세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거주주택 용도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분위가 5분위가 아니고 4분위이고,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그다음이 5분위와 3분위 순이고 2분위와 1분위의 경우 그 용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체로 거주주택구입 용도 비중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대체로 상승세이나 2010년대 후반에는 다소 그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보건 위기 시기인 2020년대 이후 그 비중이 증가세이다. 이는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 급등기에서 구매력이 있는 많은 중상류층 가구가 부동산 구입에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거주주택구입과 거주주택이외부동산구입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용도 비중을 보면 3, 4, 5분위 등 중상층의 소득분위에서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1분위와 2분위에서도 2020년 이후 부동산 구입 용도 비중이 상승했다. 따라서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분위에 무관하게 거의 모든 가구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부동산 구입에 열광적이었던 것을 함의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마련 용도 비중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특히 3분위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3분위 다음으로 2분위, 1분위, 4분위의 순으로 전월세보증금마련 용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민 중산층 가구가 전월세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많이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상환 용도 비중은 분위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이한 분위별로 공통된 패턴이 두드러지지 않는 않으며, 그 비중이 가장 작은 편이다. 사업자금마련 용도 비중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내림세인데, 이는 자영업의 축소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빚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이 2010년대 후반 이후 거의 모든 분위에서 상승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저소득분위일수록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저소득분위에서는 거주주택구입 용도

비중이나 생활비마련 용도 비중이나 절댓값에서 서로 거의 차이가 없다.

주관적인 부채상환 부담 정도는 내림세이기는 하지만, 원리금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약 70% 안팎으로 매우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대답한 가구 비중이 5분위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내림세이지만, 1분위의 경우 다른 분위와 달리 201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대답한 가구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내림세이지만, 저소득분위일수록 그 비중의 절댓값은 매우 크다.

주관적인 부채 상환부담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 지표 중에  $DTA > LTI > DSR$  순으로 주관적인 상환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DTA 지표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의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의 정도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DSR과 LTI 지표는 초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로 그 시기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가계는 소득상환보다는 담보 중심의 부채조달을 통해 부동산을 투자하며,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지만, 초저금리가 계속될 것이고 자산을 시장에서 처분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경기가 돌아오르면 변동금리의 거치식 분할 상환이 주종을 이루면서 소득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위험 지표는 오히려 가구의 주관적 상환 부담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 2) 함의

### □ 자산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경기 순응적인 가계부채

2010년대 중·후반 박근혜 정부의 ‘빚내고 집 사라’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2020년대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한 초저금리 등으로 가계의 부채조달 비용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전 국민의 재테크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순자산의 지니계수 상승과 부채 항목이 이에 기여하였다.

정의상 ‘순자산 = 총자산 - 부채’의 등식을 사용하면 부채 항목의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2010년대 중·후반 초저금리 금융환경은 실증적으로 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부채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경기 순응적인 가계부채는 ‘금융주도 부채경제’를 상징할 수가 있다.

## □ '금융 주도 부채경제'의 등장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그 이후 가계대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으며, 이는 가계의 부채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경제'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대출 중심의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그 이후에는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주도 부채경제'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가계 금융 자유화에 따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이 좋아진 상황에서, 강력한 '주택-금융' 주기가 형성될 수가 있다. 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의 금융 수요를 견인하고, 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런 수요에 대응하는 강력한 피드백을 일컫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자산 구매력은 소득, 대출, 상속과 증여, 자산처분 등에서 나오는데, 가계대출이 구매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성은 주택 가격 변동과 강한 연계성을 가진다. 이처럼 주택시장 변동과 가계대출 간 주기적 연관이 강화되어 부채의 경기 순응성이 강화되고, 저금리 기조의 부채주도 성장에서, 가계는 합리적인 자산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원리금 상환 부담과 조세부담 가중과 같은 주거 관련 비용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소비가 줄어드는 소위 '구성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저성장이 만연하고 실질 금리가 부(-)인 상황에서는 생산적 투자가 거의 없으며, 이 경우 잉여 자본은 주택 등과 같은 자산 투자 붐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처럼 생산적 자본의 수익률이 낮아서 발생한 '자산 거품'은 자본이 생산적 기회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며,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산 거품'이 합리적 대응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 거품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금융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금융' 간의 연관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통한 거시적인 통화정책과 금융기관 규제를 이용한 미시적인 금융정책 간의 연관을 맺는 방식을 달리하는 일련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더라도 미시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이에 동조화되는 것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가령 원리금 균등분할 고정 담보대출은 차주의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여주고, 금융기관의 차주에 대한 소득상환 여력에 대한 대출 심사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채무상환 능력을 강화하는 DSR의 운용을 통해 금융기관이 차주의 가계대출 총량을 고려함으로써 다중 채무자의 양산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출 심사 시스템을 담보 중심에서 소득 중심

으로 바꾸어야 한다.

#### □ 양극화된 가계대출

고소득 가구는 고신용을 이용하여 부채를 많이 내고 이를 자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생활비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미시적인 대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급증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신용 접근성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저소득층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와는 상이한 ‘two track’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무조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저소득 가구에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무 관리 및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자산시장 투자를 위해서 과도한 부채를 이용하는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산층 가구도 소득상환 측면에서 부채위험이 크며, 이는 자산시장의 변동 여부에 따라 그 위험이 클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중상류층의 가계부채 위험은 부동산경기가 경착륙하지 않거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고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부채상환 부담으로 금융불안정성이 고조될 수가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가 많은데 금리상승,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이 가구들이 쉽게 상환 불능에 처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가계는 담보 중심의 DTA 지표를 소득상환 중심의 DSR 지표보다 가계의 대출 행태에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득 중심이 아니라 담보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청년층의 대출 기회가 제약되고, 장년층의 추가적인 자산 투자로 대출이 이용될 수 있게 하고 있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소득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심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담보 중심의 대출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결론 및 제언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매개하는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 불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 금융시스템은 세계화로 인하여 금융의 불안정성과 가변성은 대단히 커져서, 국민 생활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금융 불평등의 핵심 요소인 부채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채는 개인이나 가계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히 확대된 대출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금리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가계 부채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부채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부채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고소득 계층에게 부채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인 레버리지로 기능한다. 그러나, 부채는 저소득 계층에게는 현재 부족한 생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채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하는 가구의 부담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상환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금융의 역설”은 저소득층이 가장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단이지만, 저소득층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신용이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은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제도는 경제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는 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정책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책은 달라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 차원의 지원과 재무 관리 및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인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채를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나 누진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조크레딧(mesocredit)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제도라면, 메조크레딧은 선진국에

서 신용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1976년 도입한 그라민 은행(Grameen Bank)는 빈곤층에게 적은 규모의 대출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한다. 비영리 은행으로 빈곤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에서는 적은 규모의 창업 지원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창업자금의 지원 및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탈빈곤을 돕는 것이 메조크레딧이다. 메조크레딧은 민간 후원과 정부 지원 그리고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유층과 투자회사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음의 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구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음의 소득 계층은 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지칭하며, 가구의 생계 자체가 어렵다. 이들은 4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특별한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책과 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애과정을 고려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연령과 세대에 따라서 대출 목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많았고, 30대와 40대는 주택 마련이 대출의 주된 목적이었다. 50대 이상에서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입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출 목적에 따른 차등적 금리를 제도화하여 청년기와 중장년기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의 경우 전월세나 내집 마련이 부채의 주된 동기라는 점에서 금융정책이 주택정책이나 주거 복지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금융불평등과 부채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김상봉(상명대 경제학과)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 금융화

-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 금융화 본격화
- 금융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구 생활과 경제활동
- 소비, 대출과 투자
- 전국민 신용카드 소유, 전체 가구 2/3 정도가 금융기관 대출을 함

## 금융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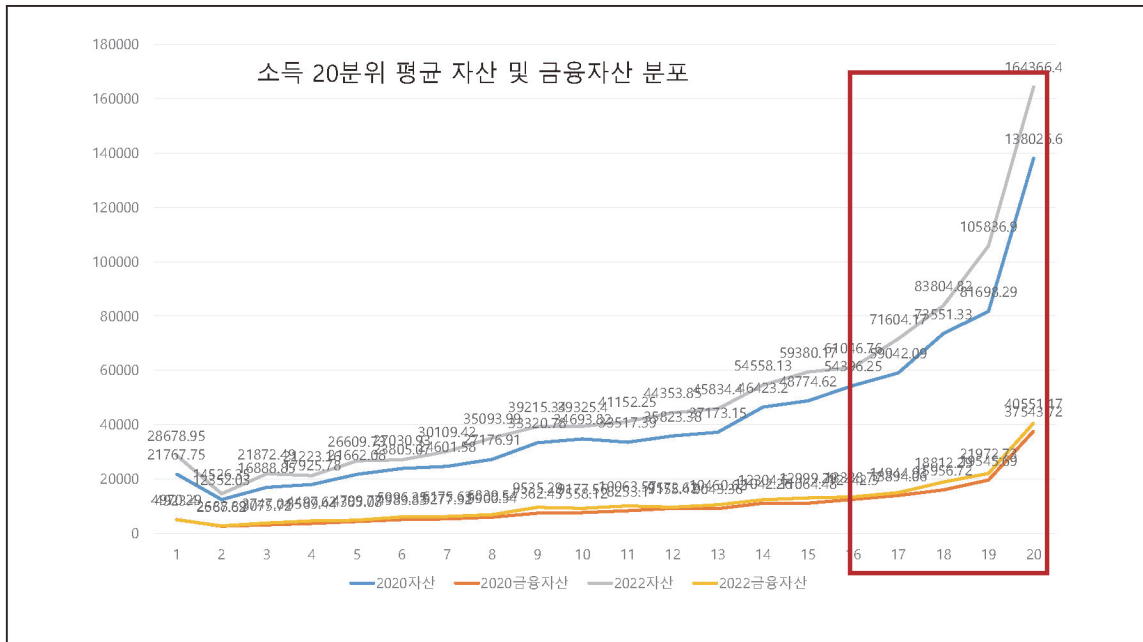
- 금융 자산의 불평등
- 집합적 자원과 기회로서의 금융 접근 격차
- 신용대출 불평등 가장 심함
  - 경상소득 < 자산 < 순자산 < 부채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2022년 전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63%, 담보대출 가구는 39%, 신용대출 가구 23%에 불과
- 금리 변화로 대출 문제가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고금리 시대)
- 자료: 가구 수준의 금융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 자산과 부채 상위 20% 집중 추이(2018-2022)

- 가처분 소득 2021년 저 점 이후 증가
- 자산과 금융자산 2020년 저 점 이후 점차 증가
- 부채와 금융부채 2020년 저 점 이후 점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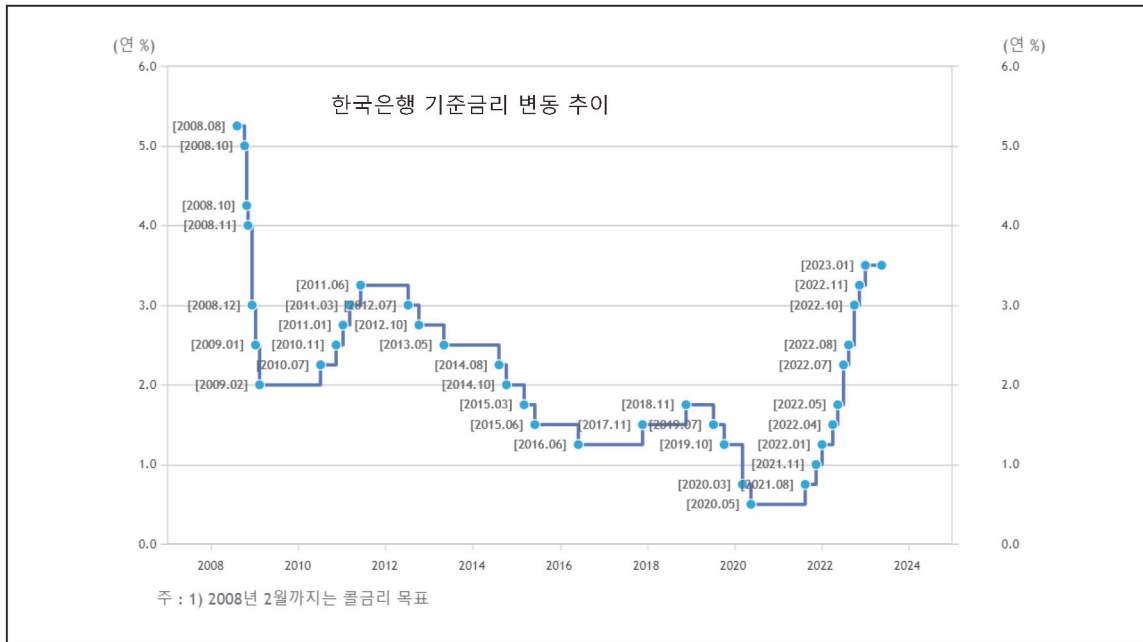
	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채	금융부채
2018	0.4798	0.6189	0.6726	0.8215	0.8368
2019	0.4720	0.6233	0.6759	0.8226	0.8355
2020	0.4655	0.6218	0.6680	0.8177	0.8309
2021	0.4639	0.6266	0.6747	0.8209	0.8353
2022	0.4711	0.6329	0.6780	0.8271	0.8414

자료: 통계청 (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매년 3월 조사)



## 부채의 두 가지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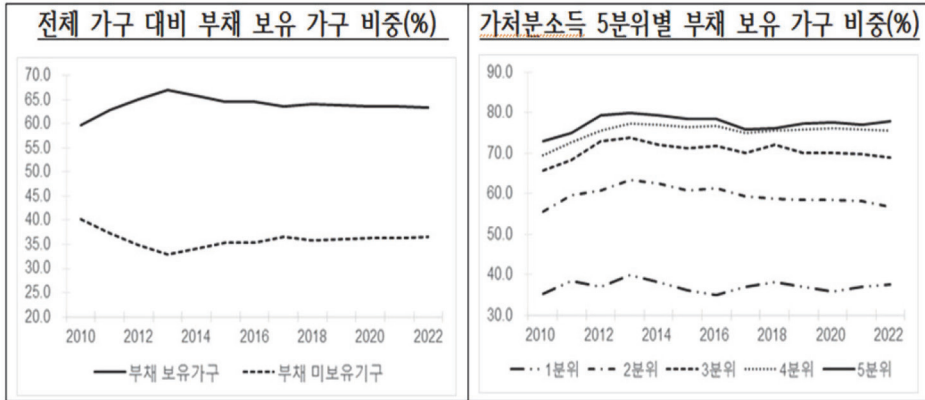
- 레버리지 기능
  - 금융은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
  - 자원
  - 부채는 능력의 지표
  - 중산층과 상층
- 생계유지 보완 기능
  -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 부채는 생활고의 지표
  - 하층
- 부채는 금리변동에 따라 치명적인 몫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소득계층과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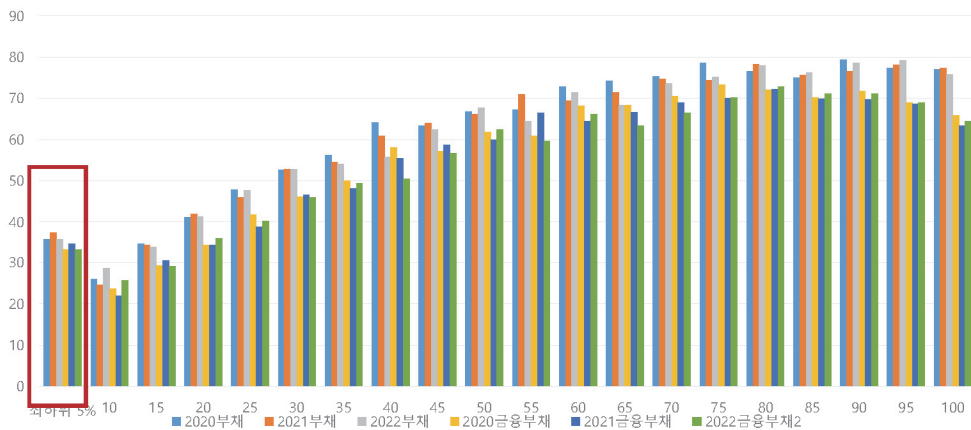
-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높아짐. 고소득층은 부채를 레버리지로 이용
- 최상위 20%(5분위)에서 부채 비율 늘어남(76.0 → 77.8%), 하위소득 분위에서는 부채 비율 줄어듦(1분위 38.1% → 37.6%, 1분위 58.9% → 56.9%, 3분위 72.0% → 68.8%)
- 2018~2022년 기간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에 따른 대출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은 부채를 부동산 투자의 지렛대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됨
- 고소득 계층은 신용이 양호하여 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저소득층은 신용과 담보대출 기회가 적음
- 최하위 소득 0.5%의 부채 비율은 73.2%로 소득 하위 5%의 3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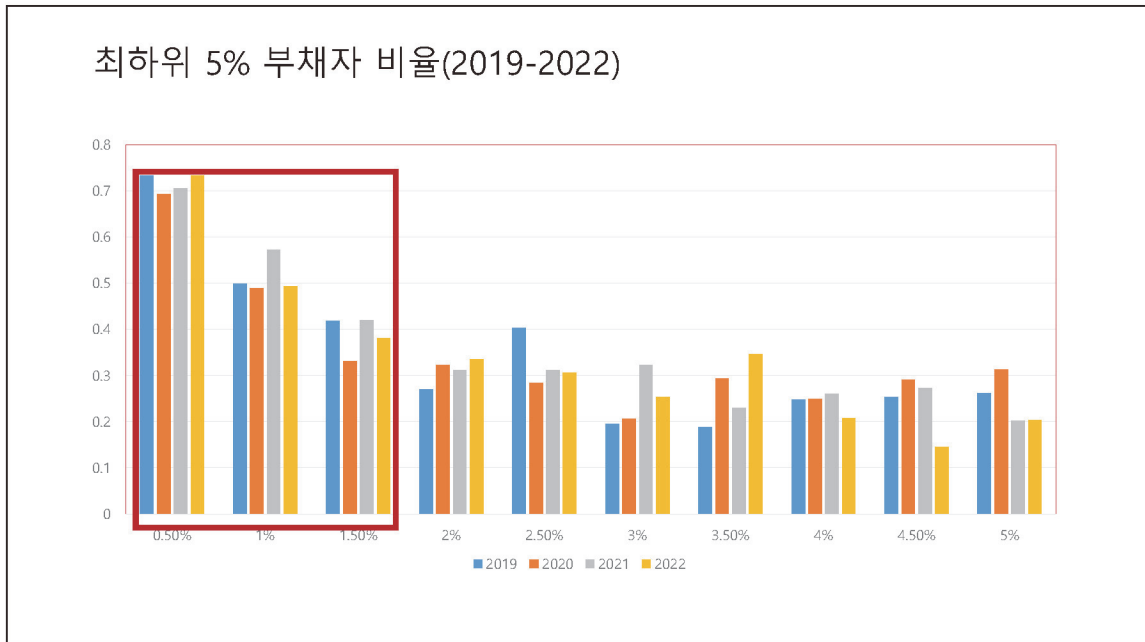
부채 보유 가구 비중(%) 추이: 2000~2022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

가처분 소득 20 분위별 부채자 비율(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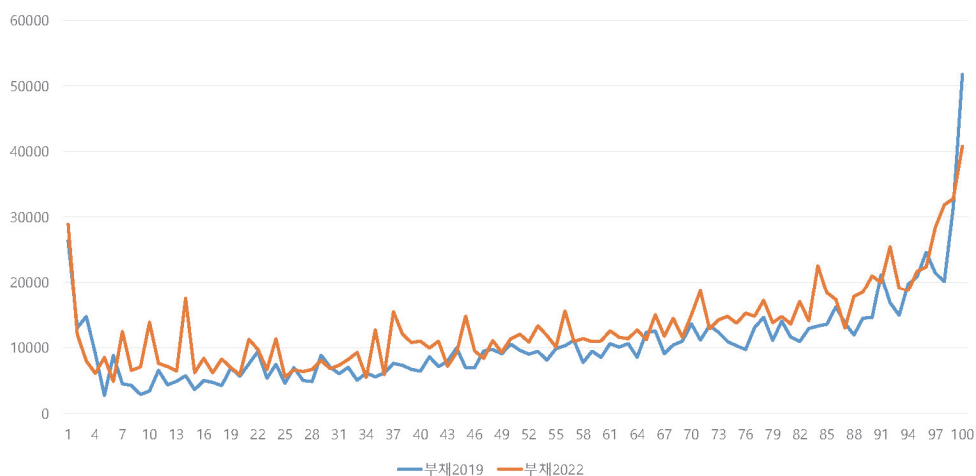
### 누가 최하위 1.5% 가구가 되는가?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최하위 1.5%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3.66배 높음 (저 임금, 불안정 고용)
  - 고용주가 정규직 피고용자에 비해서 최하위 1.5%에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3.42 배 높음 (사업 실패, 적자 경영)
  -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가 최하위 1.5%에 속할 가능성 5.6배 높음 (빈곤 가구)
- \* 학력, 연령, 성별, 직업, 주거 형태, 거주지역과는 관계 없음

## 부채 규모

-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액수도 커짐
- 고소득 계층은 부채비율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가구 당 평균 부채 액도 증가하였음
- 중위소득 계층에서 부채비율은 줄었지만, 가구 당 평균 부채 액은 증가하였음
- 최하위 1% 소득계층 부채 비율도 높고, 평균 부채 액수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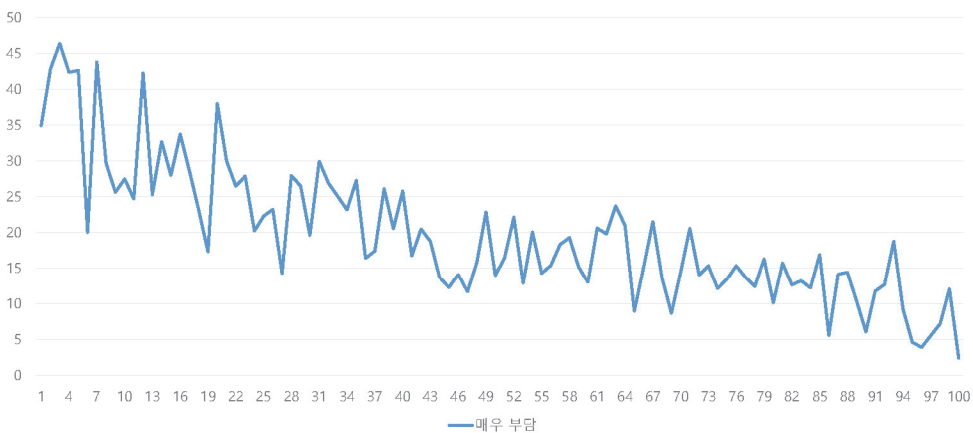
소득 100 분위별 부채 액수(2019 및 2022)



## 부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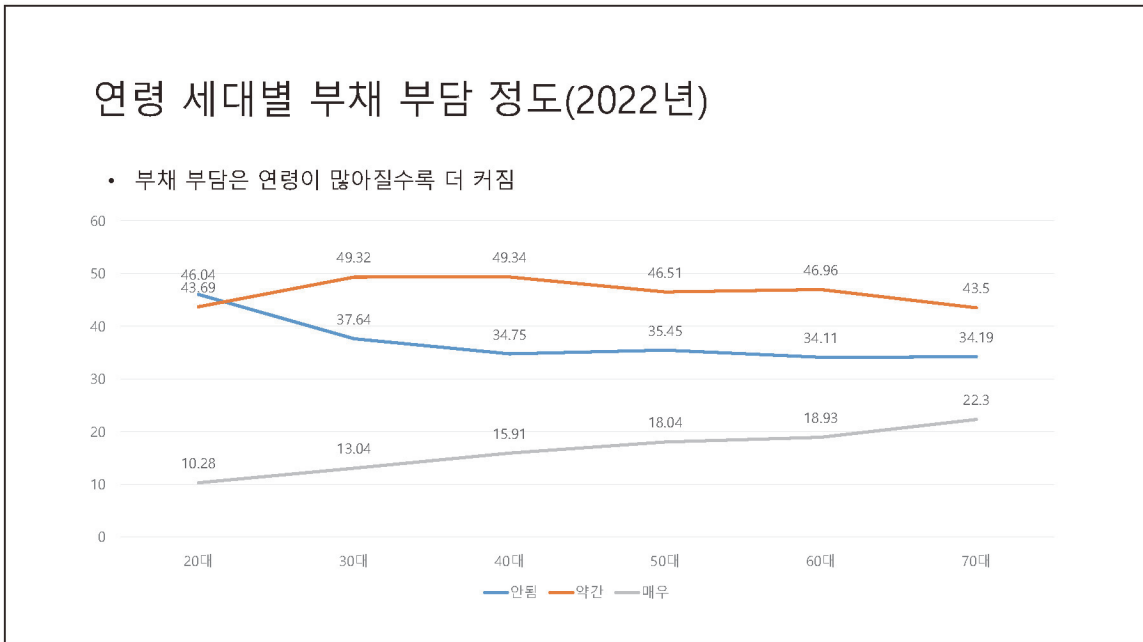
- 부채 부담은 소득 수준과 반비례
-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부채가 생계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대단히 높음
- 소득 최하위 5% 가구 중 부채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정도로 매우 높음. 반면 소득 최상위 5%는 6.3%만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
- 고령 세대에서 부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20대 10.3%, 70대 22.3%)

### 부채 부담 주관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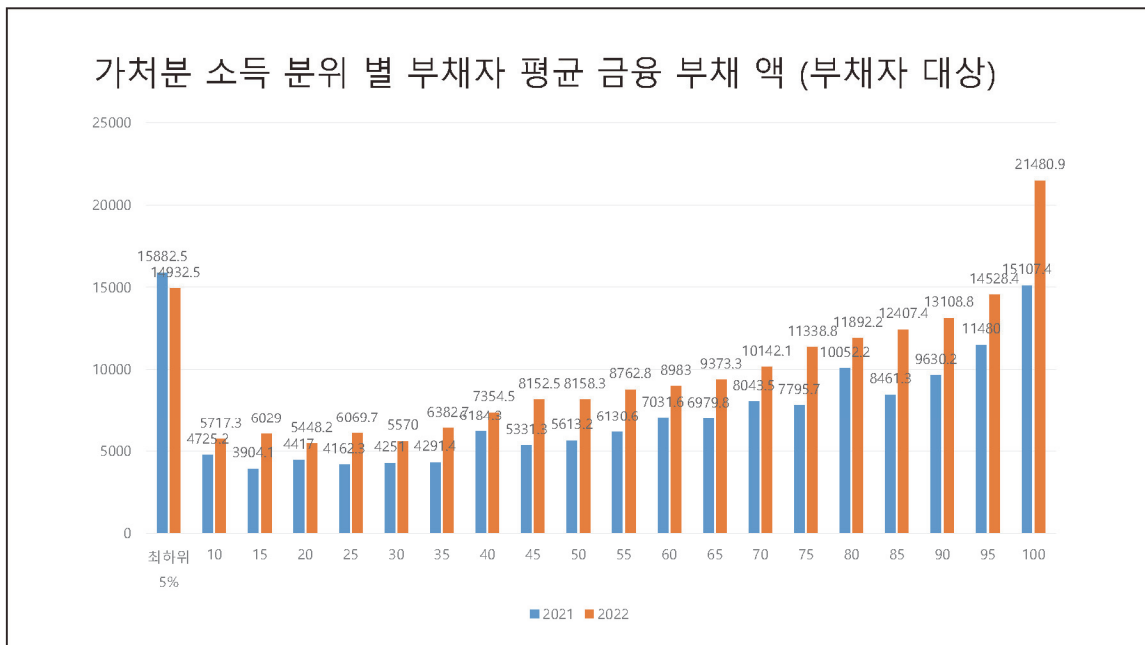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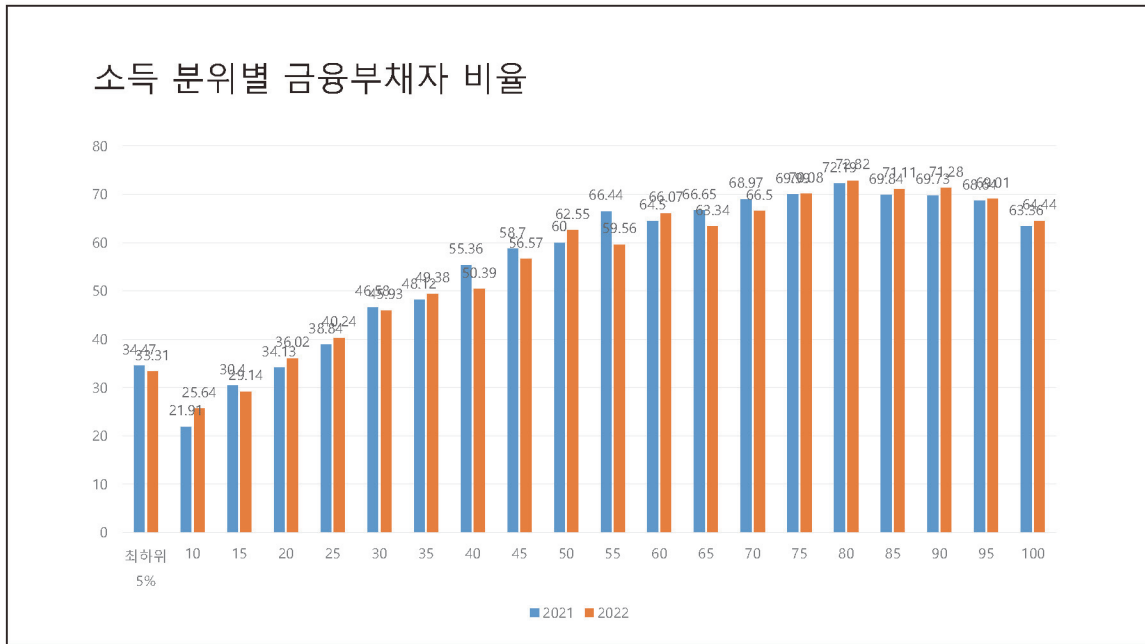
주: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응답 중(부담 없음, 약간 부담, 매우 부담)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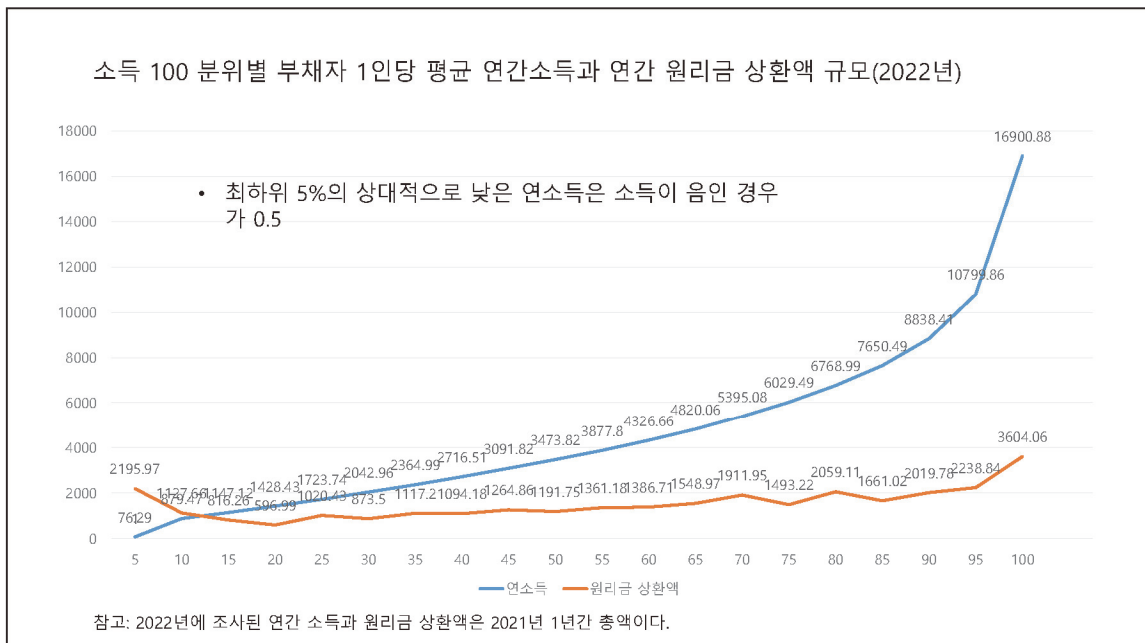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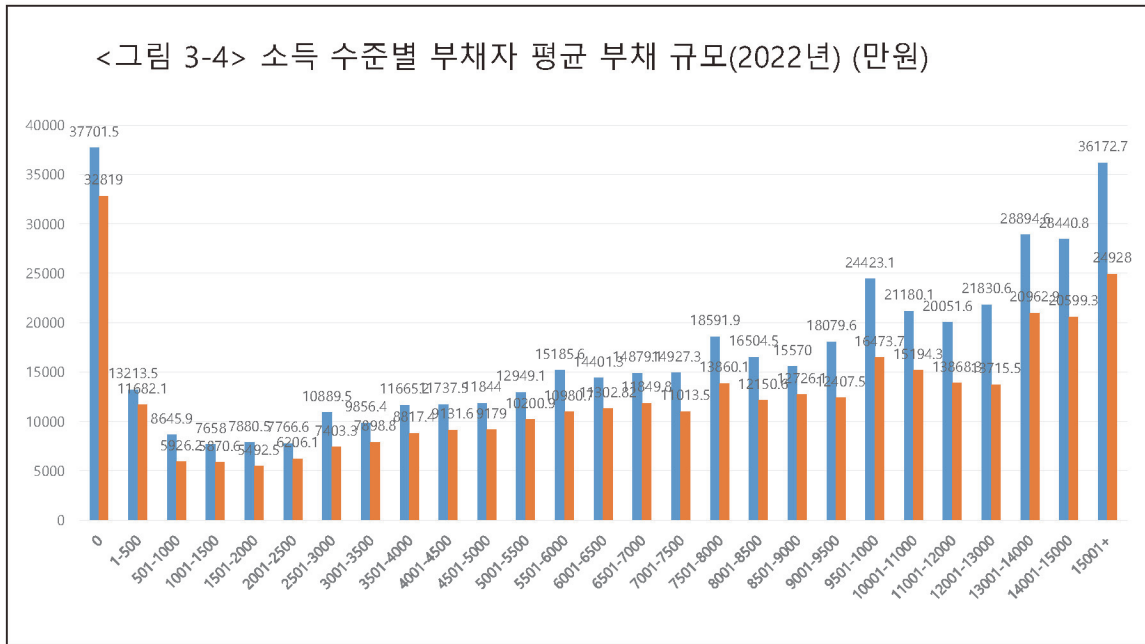




### 금융부채

- 가구 부채의 84% 정도가 금융 부채임
- 금융 부채 비율도 일반 부채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3배 이상의 부채 비율을 보임
- 그러나 최하위 5%는 하위 10%보다 부채비율이 1.5배 높음
- 최하위 5%의 부채 액은 하위 10%보다 3배 정도 높고, 최상위 5%와 비슷한 수준임 (비대칭적 U자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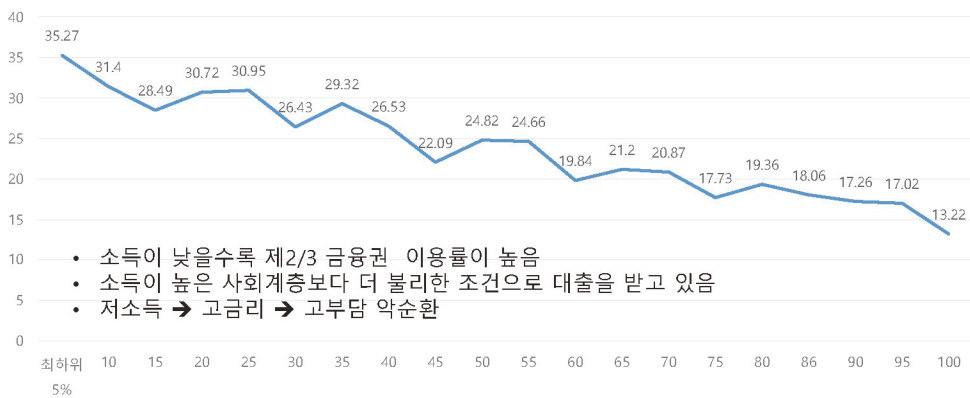


### 부채 증가 원인(2022)

-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채 증가 원인이 다름
-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원인은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큼, 중상층은 거주 주택 마련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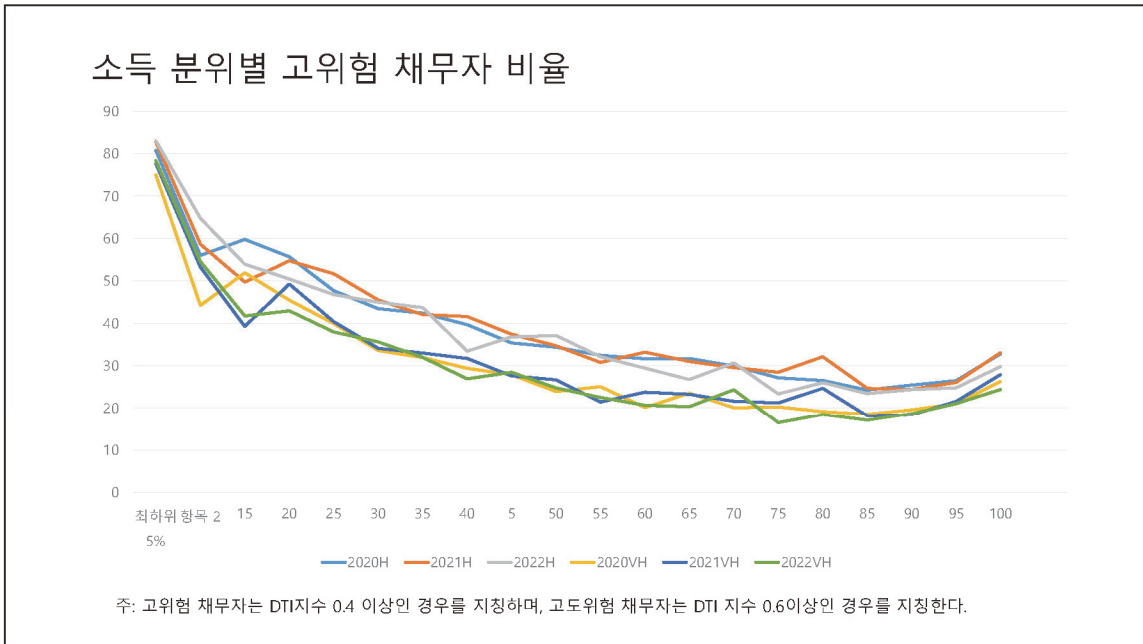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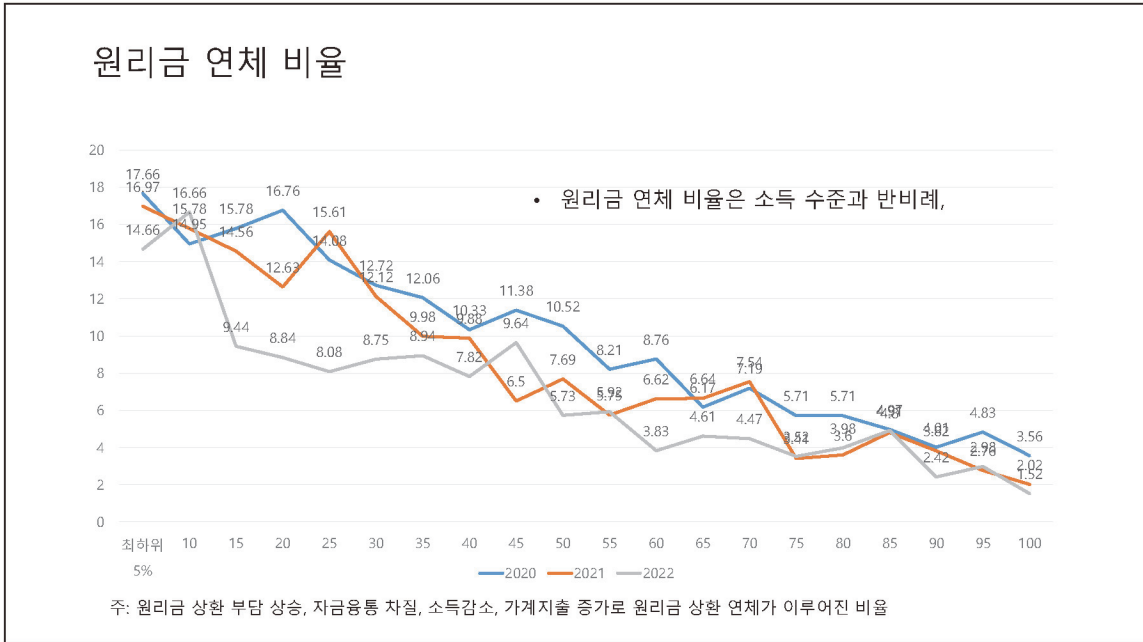


### 제2/3 금융권 금융부채 비율



- 소득이 낮을수록 제2/3 금융권 이용률이 높음
- 소득이 높은 사회계층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있음
- 저소득 → 고금리 → 고부담 악순환

참고: 제2/3 금융권은 저축은행, 보험회사,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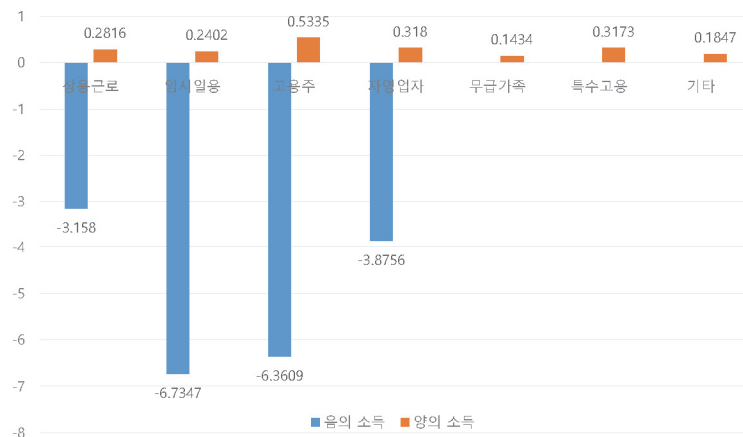


## 마이너스 소득 가구 추이

- 전체 가구 중 0.4~0.5% 가구가 마이너스 소득가구
- 2022년 기준 약 11만 가구가 마이너스 소득가구
- 마이너스 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와는 또 다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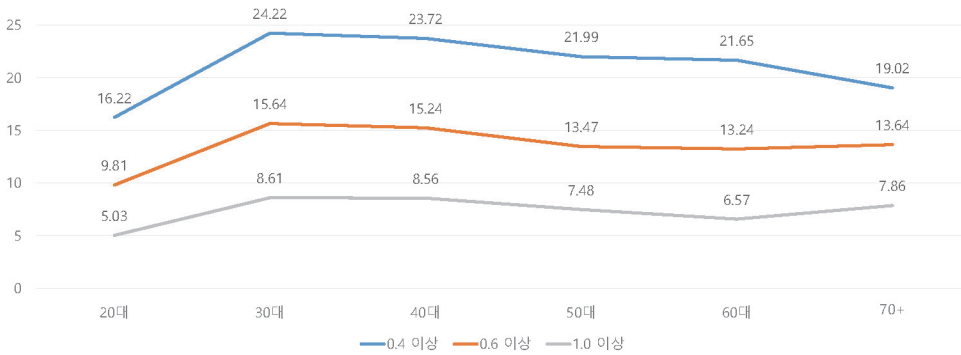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0.75	1.29	0.51	0.69	0.60	0.44	0.41	0.67	0.57	0.59	0.58	0.37	0.51

## 마이너스 소득자 고용지위 별 DTI 지수(2022)



### 세대 별 대출 위험 수준별 분포(2022년)

- 영끌 대출의 문제는 주로 30대와 40대의 문제
- 30• 주택과 관련된 대출 문제로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의 조율 필요



### 맺음말

- 금융 불평등은 금융자산의 불평등과 집합적인 금융 자원 접근성 불평등으로 이루어짐
- 부채 가구 비중이 약 2/3 정도에 달하여 가계 대출 중심 부채경제가 일반화되었음
- 금융 대출은 레버리지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 고소득층은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큼 - 고소득 계층 대출비율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졌음
- 저소득층은 신용빈곤층으로 제2/3 금융권을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이용하여, 저신용-고금리-고부담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줌
- 고위험 채무자 비율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two track)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저소득 고위험 대출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액 대출 중심의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액 대출 중심의 메조 크레딧(meso-credit)이 필요함. 메조 파이낸스는 스타트업 지원 수준에 준하는 금융 지원을 담당함
- 고소득자 위험 비율이 낮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고소득자 위험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함
- 마이너스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대책(마이너스 소득 원인 진단과 재무관리 서비스 포함)이 필요함.
- 청년 세대 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을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함





# 《《 토론 문 》》

## 한국의 불평등 - 금융과 부채를 중심으로

- |                   |                      |
|-------------------|----------------------|
| ① 경제와 금융불평등       | 이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 ② 한국서민과 금융부채      | 이효준 서민금융진흥원 노동이사     |
| ③ 청년과 금융불평등       |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
| ④ 금융불평등의 현실과 노동조합 |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    |
| ⑤ 정부 정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 토론: 경제와 금융불평등

2023.6.7.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 요약: 금융불평등에 대한 다각적 접근

- 금융화 - 금융불평등의 배경
  - 다극화 - 금융불평등, 부채불평등의 실상
  - 소득계층과 금융부채 - 계층별 접근 필요성
  - 자산 기반 한국 금융 - 금융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관계
- 금융화 흐름 속에 가계대출 중심 금융주도 부채경제, 부채-자산-소득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금융의 역설, 금융불안정 문제
- 고신용자, 저신용자 투 트랙 접근법, 재무관리 일자리 등 종합서비스, 메조크레딧, 복지정책과 결합, 생애과정 고려

## 금융불평등: 금융자산 + 금융접근성

- 금융화 현상의 이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재정보수주의, 금융규제 완화, 세계화의 흐름
- 거시경제정책: Privatized Keynesianism- 거시정책은 주로 금융으로, Ownership Society, 빚내서 집사라 정책 등
- 금융불평등의 근거에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있음
- 소득불평등 → 유동성 확대 (Saving Glut, 소비 따라잡기, 저금리, 대출규제 완화 등) 및 부채 누적 → 각종 경제 사회 문제 야기

3

## 가계부채: 금융접근성 vs. 약탈적 금융

- 가계부채를 통한 금융접근성 확대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가?
- 금융접근성 개선 또는 자본시장 불완전성 완화 가설: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완화하여 불평등도를 줄임(Galor and Zeira 1993; Aghion and Bolton 1997; Bardhan 2000; Jacoby and Skoufias 1997; Baland and Robinson 2000; Galor and Moav 2004 등)
- 금융접근성 편향 또는 낙수효과 부재 가설: 부채증가로 인한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며, 성장의 혜택도 주로 고숙련 노동자에게 돌아감(Rajan and Zingales 2003; Jerzmanowski and Nabar 2013 등)
- 금융접근성의 단계별 편중 완화 또는 편중 심화 가설: 부채 증가가 일정 수준까지는 불평등을 완화하며 그 이후에는 불평등을 악화시킴(Park and Shin 2017). 일정 수준까지는 불평등을 악화시키나 그 이후부터는 완화시킴(Greenwood and Jovanovic 1990): 위의 두 논리의 다양한 조합
- 현재 '어느 한 가설이 지배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증적으로 확인할 문제

4

## 한국의 가계부채와 금융불평등

- 한국의 금융화는 부동산 중심으로 진행, 과도한 가계부채는 불평등과 상호작용
-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유동성 + 불안정한 금융규제 + 부동산의 금융화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낮은 보유세 등) + 저성장 및 저투자 → 지대추구 경제로 변질
- Rent Seeking: Making → Taking, 금융이 중요한 매개체
- 중요 사례: 전세자금 공적보증을 통한 사실상의 양적 완화(100조원 이상 부동산 시장에 투입) →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리스크
- 미시적 금융접근성 편의와 거시적 안정성이 상충하는 상황
- MZ세대로 금융리스크가 편중되는 현상
- 자산불평등 확대 및 금융불안정성 리스크 심화

5

##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이 관건

- 금융접근성을 높이되 약탈적 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 거시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이 8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건전성 규제는 제대로(특히 DSR)
- 금리가 높아지면서 계층별 접근성 격차 문제 심화 →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 초고금리 불법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문제에 대응할 필요
- 청년층에 불리한 신용평가 문제 → 비금융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방식, 청년층 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 활용 등
- 금융부문의 선진화: 부동산 중심, 담보 위주 대출, 변동금리 중심 대출, 무한 책임대출 등 공급자 중심 관행을 선진화. 금리 위험의 적절한 배분, 비소구대출 확대 등 필요
- 자영업 등에 대해 금융과 컨설팅 등 지식 정보 서비스 결합

6

# 청년과 금융불평등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청년의 부채문제, 불평등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거론 된 지 꽤 오래되었다. 최근 주택문제, 코로나 등 원인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금융문제를 이야기할 때 영끌(영혼까지), 빚투(빚내서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 문제로 청년 개인의 왜곡된 의사결정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 계층의 금융문제의 본질은 청년 개인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을 강제하는 사회구조의 원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1. 현황: 청년의 경제적 상황

### 1-1 청년부채 현황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말 가구주 평균 9,170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된 것인데,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경우 평균 5,0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 1,464만 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가구주 연령별 평균부채 2022년

(단위: 만 원)

연령	평균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9,170	368	4.2
29세 이하	5,014	1,464	41.2
30~39세	11,307	118	1.1
40~49세	12,328	120	1.0
50~59세	10,763	688	6.8
60세 이상	6,045	342	6.0

출처: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같은 조사 입주형태에 따른 조사에서도 월세가구 중 부채보유가구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부채가 3,730만 원으로 약 24.3% 증가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부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주의 경우도 평균 5.3%로 늘어나 이는 부채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약한 계층의 경우 부채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안정한 청년층의 경우 부채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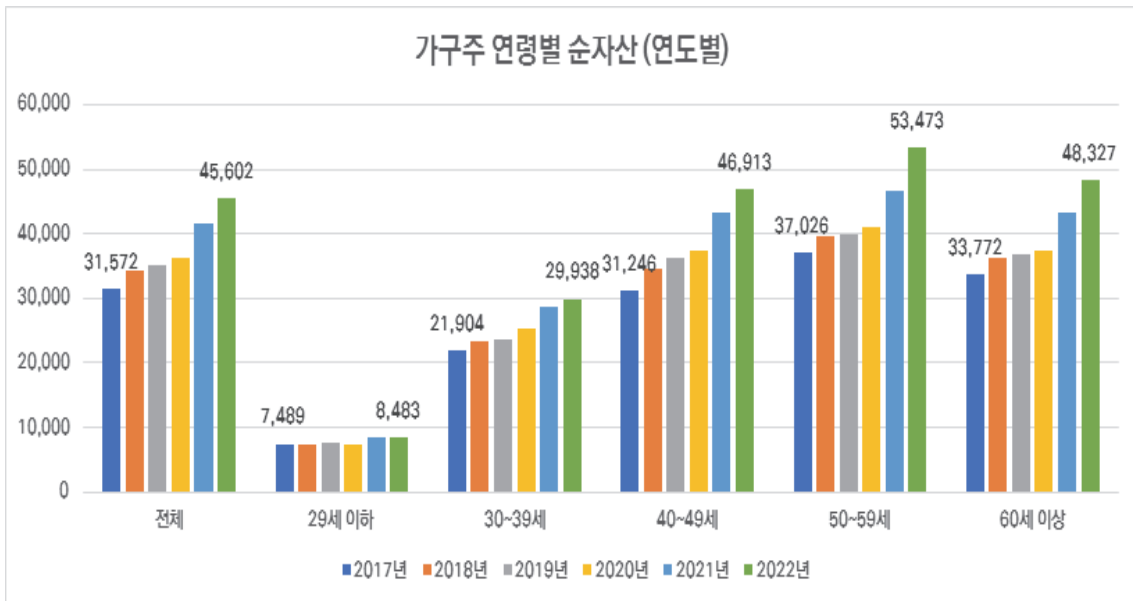
### 1-2 청년층 자산불평등 심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보유액은 평균 45,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했다. 그러나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평균 8,483만 원으로 유일하게 감소를 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된 연령의 경우 50대 가구주로 전년대비 약 14.6%, 약 6,807만 원이 증가되어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같은 통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 보유액도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약 8.7% 4,045만 원 증가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5% 1,270만 원만 증가되어 계층간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입주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자기집 소유의 경우 7,027만 원 증가되었다. 그러나 월세거주자의 경우 201만 원만 증가되었다.

통계청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29세 이하는 55.9%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형태와 입주형태에 따라 20대 계층의 자산격차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출처: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청년들의 자산 증가율은 낮은 상태로 특히 29세 이하 가家主의 경우 자산증가 폭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1-4 소득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19 등 원인으로 증가폭은 감소되었다. 특히 20~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에 비해 소득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령대별 평균소득 증감률

연령대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총 계	297	10	3.4	309	12	4.1	320	11	3.5
19세 이하	78	3	4.6	84	7	8.5	96	12	13.9
20~24세	155	6	3.8	168	14	8.8	173	5	2.9
25~29세	237	8	3.5	251	14	5.9	258	7	2.6
30~34세	299	9	3.1	312	12	4.1	319	7	2.4
35~39세	341	10	3.0	356	15	4.3	368	12	3.4
40~44세	362	14	4.1	379	17	4.8	392	13	3.3

45~49세	367	11	3.2	382	16	4.2	394	12	3.0
50~54세	360	9	2.7	375	15	4.2	388	13	3.4
55~59세	320	7	2.4	337	18	5.5	352	15	4.4
60~64세	235	1	0.5	254	19	8.1	263	9	3.6
65세 이상	168	13	8.5	162	-6	-3.5	172	10	6.4

출처: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2020, 2023.01.25, 연령대별 소득

### 1-5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재무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구 평균 16.7%이지만 29세 이하 가구의 경우 37.1%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룬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으로만 따로 분석을 하면 29세 이하 가구의 경우 49.3%로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부채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가구주 연령별 재무건전성 자산 대비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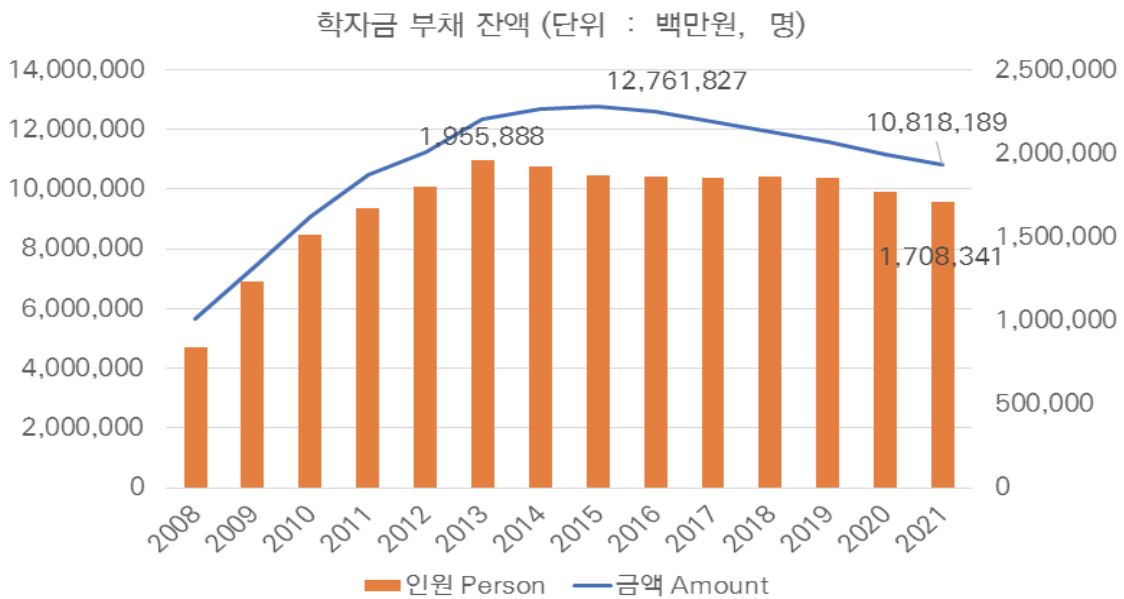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연령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평균	전체	18.4	18.2	18.3	18.5	17.5	16.7
	29세 이하	24.2	26.2	29.1	32.5	29.2	37.1
	30~39세	24.0	25.7	27.3	28.4	28.0	27.4
	40~49세	21.7	22.6	22.8	23.3	22.0	20.8
	50~59세	19.0	18.2	18.9	19.5	17.8	16.8
	60세 이상	13.3	12.9	12.4	12.4	11.7	11.1
부채 보유	전체	23.6	23.4	23.6	24.0	22.8	21.8
	29세 이하	35.9	38.7	41.2	42.4	39.0	49.3
	30~39세	29.7	31.0	32.5	33.3	31.9	31.7
	40~49세	26.5	27.3	27.4	27.9	26.4	25.1
	50~59세	23.4	22.5	23.5	23.5	21.9	20.6
	60세 이상	18.9	18.3	17.8	18.2	17.5	16.5

출처,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1-6 학자금부채



출처: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한국장학재단 통계연보(2021), 재가공

현재 학자금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청년은 2021년 말 기준 약 170만 명이다. 부채의 잔액도 약 10조 원을 넘는다. 한국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제도와 학자금대출 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자금부채 문제는 존재한다. 이 남아있는 학자금 부채로 인한 문지마 취업, 결혼 회피, 삶의 활력저하 등 문제가 있다. 이용호(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청년층 학자금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행률 분석 연구에서 이를 밝혔는데 학자금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2차 노동시장에 머무는 비율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표 4. 학자금 대출 보유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행 비율

t-1 \ t	학자금 대출 보유(N=325)		학자금 대출 미보유(N=991)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	4.92	1.85	3.53	2.72
2차 노동시장(%)	7.77	27.08	9.23	24.82
이행 경험 있음(N(%)) <sup>2)</sup>	236(72.70)		670(68.70)	
이행 경험 없음(N(%))	89(27.30)		321(32.30)	

출처: 이용호(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청년층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행률 분석, 2021년

기타: 청년층의 불충분한 주거보장정책과 높은 부동산 가격은 청년의 삶을 팍팍하게 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정책이 더 늘려야 하는데 그 속도보다 대출을 통한 주거대책이 중심이다. 이는 청년의 삶이 금융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2. 청년층 불평등과 부채문제 원인 개괄

### 1)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부담, 삶의 필수 비용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 보증금 증가 -> 월세 증가
- 대학, 자격증 등 교육비
- 통신비, 식비 등 생활비 증가

### 2) 저(중)복지로 인한 복지의 금융화 (금융과잉)

- 금융정책을 통한 복지대체 (주거대출 확대, 자산증식(재테크) 장려)
- 주거관련 규제완화 및 대출장려 정책 (특히 청년)
- 자산기반복지를 통한 정책지원의 한계 (자산형성프로그램 확대)

### 3) 금융소외가 강화되는 주류 금융시스템

- 저신용인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공급의 부족 (금융소외)
- 편향적인 신용등급공급체계로 구조적인 배제
  - : 신용도, 자산/소득의 유무에 따른 금융공급
  - : 소득의 규모, 안정성이 확보된 계층에게 더 많은 금융공급

### 4) 개인부채를 바라보는 제도적·사회적 편향

- 부채를 갚지 않는 것은 불성실하고 도덕적해이라는 인식.
- 학자금부채, 코로나19로 발생 된 부채 등 사회적문제, 사회적부채라는 인식 확대 필요.
- 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주는 것과 개인의 부채를 상환해주는 이중잣대.

### 3. 대안방향

#### 3-1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

앞서 언급한 청년불평등과 금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확대가 절실하다. 교육, 의료, 주거, 돌봄, 일자리 등을 보장이 필요하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자금부채탕감을 적극적으로 사회가 고려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탕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미 북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무상교육 혹은 아주 낮은 대학 등록금으로 보편적 고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답게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학생복지재단으로 개편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돈 없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보편교육으로써 교육권 확대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3-2 청년 사회적금융 확대 및 청년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 <청년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사업화 제안>

- ※ 신용(금융)상담, 생활금융경제교육, 신용회복지원, 금융피해(권리구제) 등 예산사업 필요. (약 3억원)
- ※ 민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청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운영 필요함.
- ※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은행 운영 사례 참조.

##### <지역 공공은행 설립 추진>

- 시금고를 활용한 공공은행 출연 및 설립 <근거마련 필요>
  - \* 대구시예산 약 1조 1천억 원
-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금융화

##### <청년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기금출연, 사업운영
- 10억원 출연, 사업비 매년 2억 원

## “금융 불평등과 신자유주의 금융화”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

‘금융 불평등’ 연구는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인하여 본격화된 금융 불평등(특히 부채 이용 기회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특히 자산 불평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금융 불평등 관련 선행 연구나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금융 불평등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 방법론은, 향후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그럼에도 굳이 아쉬운 부분을 지적한다면,

첫째, 기본적으로 참여연구자가 모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표본이 2만 가구로 확대됨과 동시에 조사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일관성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연구자별로 분석 대상 기간이 달랐고, 일부 시계열 분석이 5년으로 한정됐던 점은 아쉬움이 있음. 분석 대상 기간은 제1장과 3장이 ‘2018~2022년’, 제2장이 ‘2017년~2021년’, 제4장이 ‘2010~2022년’ 등이었는데, 시계열 분석을 2012년부터 2022년으로 통일할 필요 있었음.

관련하여 발제문 [그림 1-3] ‘부채, 금융부채, 가구소득 추이’와 관련하여 가구소득은 가구평균 소득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가 분명하나, 본문 설명에 따르면 부채 데이터는 ‘대출자 1인당 평균 부채액’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평균 데이터<sup>1)</sup>와는 상이함. 다른 자료에서 추출한 데이터이거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추산한 데이터인지를 명시할 필요 있음.

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평균 부채는 2012년 5450만원, 2017년 7099만원, 2022년 9170만원임.

둘째, 본 연구는 ‘금융기관은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금융 불평등은 금융기관 경영의 부산물’임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게다가 한국 사회 전반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sup>2)</sup>’라는 용어를 사용,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금융화나 금융 불평등을 야기한 현실 금융시스템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음. 물론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향이나 목표에서 벗어난 내용일 수 있지만, 연구의 전반적 맥락과 인과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함. 향후 후속 연구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관련 내용과 통계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신자유주의 금융화(또는 금융자유화)는 일반적으로 ‘①금리 자유화<sup>3)</sup> → ②대출의 증권화(자산유동화)<sup>4)</sup> & 파생상품화 → ③금융기관의 겸업화 및 대형화’라는 경로를 거치면서 진행됨. 이는 한 마디로 ‘수익극대화(or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로 변신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동시에 자본의 축적이 생산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sup>5)</sup>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이기도 함. 이러한 변화가 미국 등 신자유주의의 주도국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란 용어가 탄생함.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자유화가 급진전되었음.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물론 현실의 금융시

- 
- 2)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란 기존의 지배계급이 장기간 치유가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경우를 지칭함.
  - 3)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금융 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규제 정책의 하나였음. 그러나 1970~1980년대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세계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함.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최고 금리가 제한되었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 조치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됨.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융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됨.
  - 4) 은행이 수익극대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 기법에 의해 증권화시킨 것으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능함. 미국의 MBS(모기지 증권)도 ABS의 일종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은 자산보유자(주로 금융기관)가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증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는 특징을 지님.
  - 5) 현 금융자본주에서는 기업은 물론 주택, 식량, 원자재 등 세상의 모든 것을 금융 상품화, 즉 증권이나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거래됨. 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인수합병(M&A)이 범위의 경제나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면, 금융화 시대의 M&A는 시세차익(capital gain)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임.

스텝 또한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됨. 하지만 아직은 ‘낡은 것이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탄생하지 않은 시기<sup>6)</sup>’라 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분석과 논쟁 대부분은 위기의 원인을 투자은행과 자본시장의 문제로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이는 은행(간접금융)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모순, 즉 자산의 대부분을 사회적인 방식(불특정다수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운용은 이윤극대화(or 주주이익극대화)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해 상충’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은행은 사회적으로 ‘신용창출<sup>7)</sup>’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금융 불평등의 핵심적 영역인 ‘부채’ 문제와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은행<sup>8)</sup> 총자산의 약 92.8%가 부채, 주주의 돈이라 할 수 있는 자본금은 불과 2.1%에 불과함.

[표1: 국내 은행업 재무 상태]

(단위: 조원, %)

구 분	국내은행		시중은행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자산	3,570	100.0	1,976	100.0
부채총계	3,313	92.8	1,849	93.6
자본총계	257	7.2	127	6.4
자본금	74	2.1	22	1.1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요약 재무상태, 은행계정)

주) 국내은행은 총 20개로 일반은행이 15개이며, 특수은행은 5개임.

일반은행 중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이외 지방은행 6개와 인터넷전문은행 3개가 있음.

6)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권위기(interregnum)

7) 은행이 대출에 의해서 당초 예금액의 몇 배 이상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현상. 은행은 본원적 예금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남기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는데, 이 대출금이 다시 예금되어서 지급준비만 남겨지고 대출되는 과정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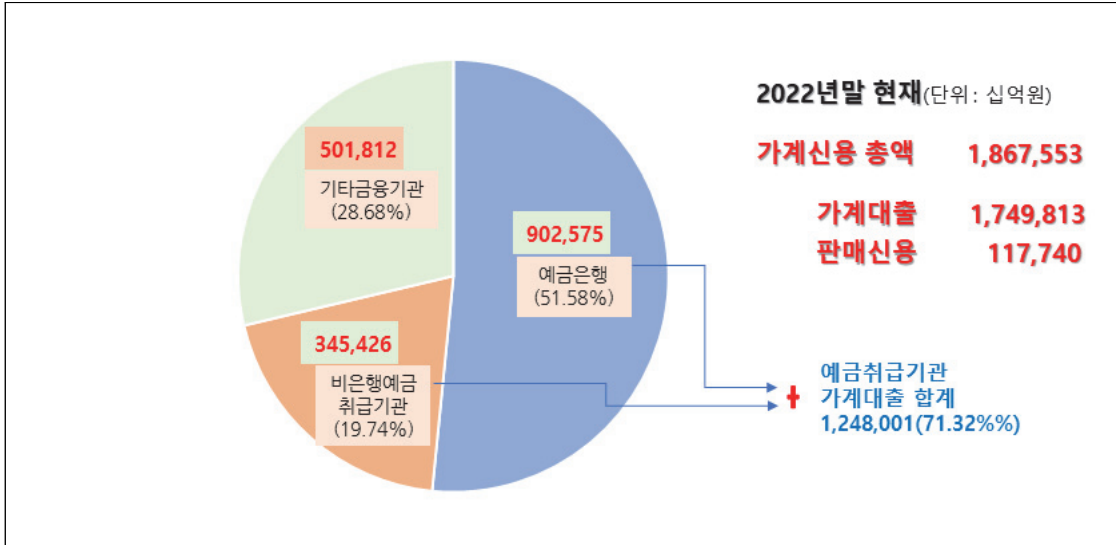
8) 국내은행) 현황(20개, 2022년말 기준)

- 일반은행(15): 시중은행(6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인터넷전문은행(3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 특수은행(5):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가계대출의 51.58%가 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합산하면 71.32%의 비중

[그림1]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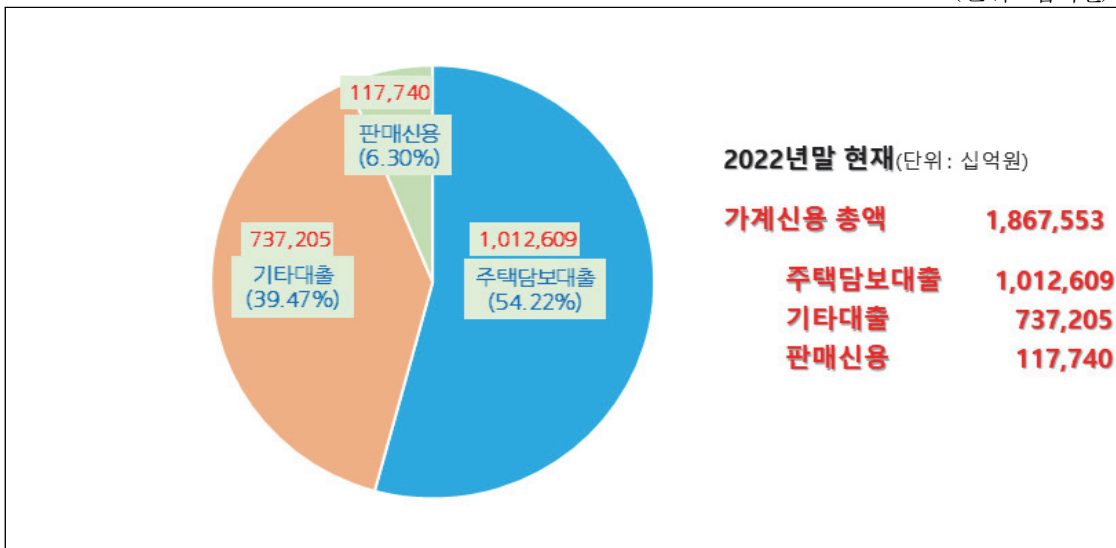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지칭.
- 주2) 기타금융기관은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을 지칭.

-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이 54.22%

[그림2] 용도별 가계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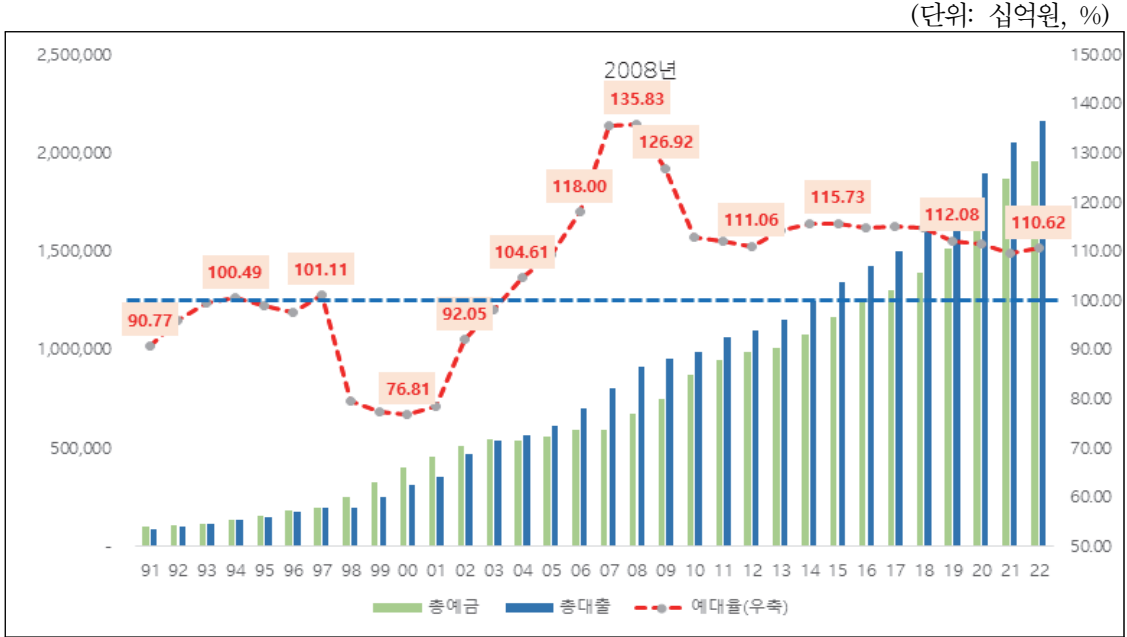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금융화의 결과1: 예금대비 대출 비율 상승

[그림3] 예금은행 총예금 · 총대출 · 예금대비 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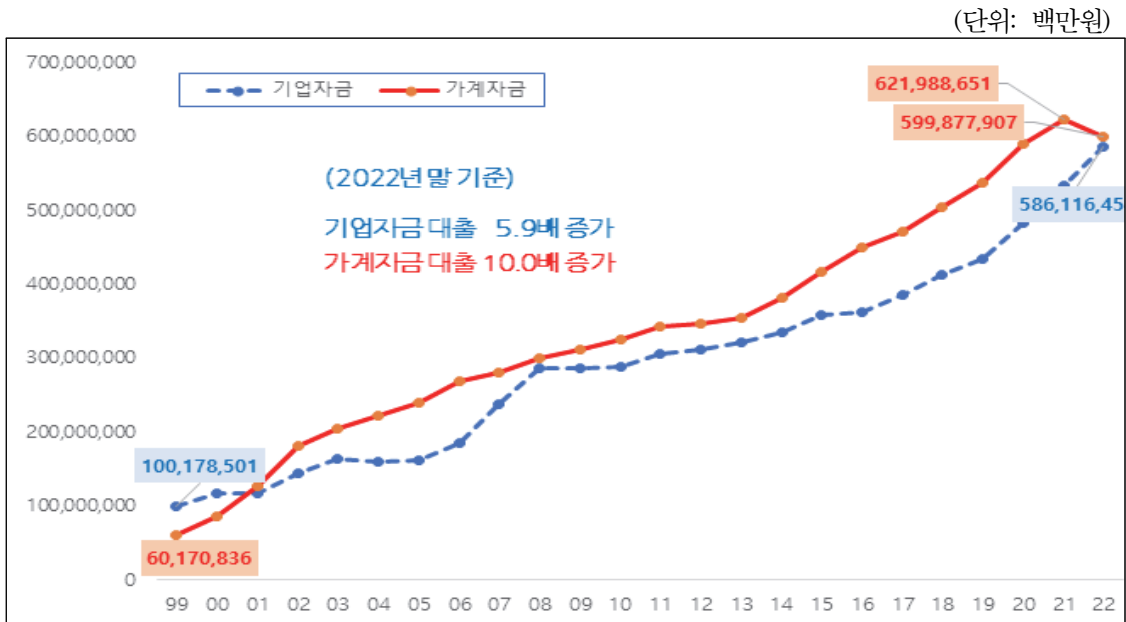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총예금 =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총대출 = 산업별대출금 + 가계대출

○ 금융화의 결과2: 가계대출(retail banking) 급증

[그림4-1] 시중은행 기업자금 및 가계자금 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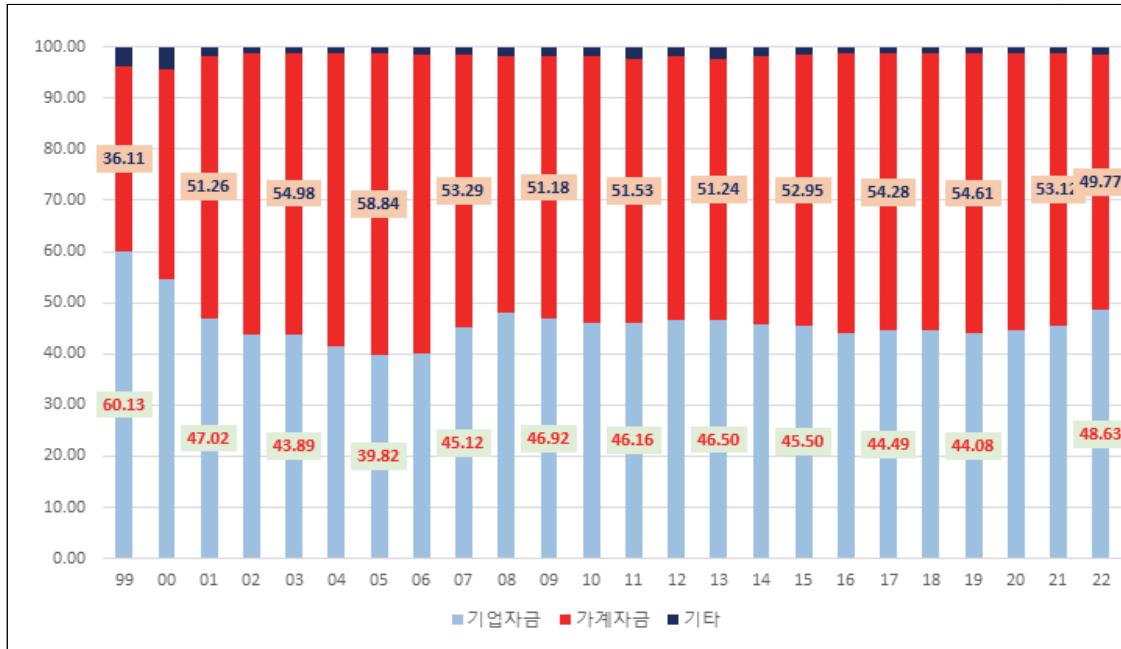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연도별로 존재했던 시중은행 대출금의 합계액.



[그림4-2] 시중은행 부문별 원화대출금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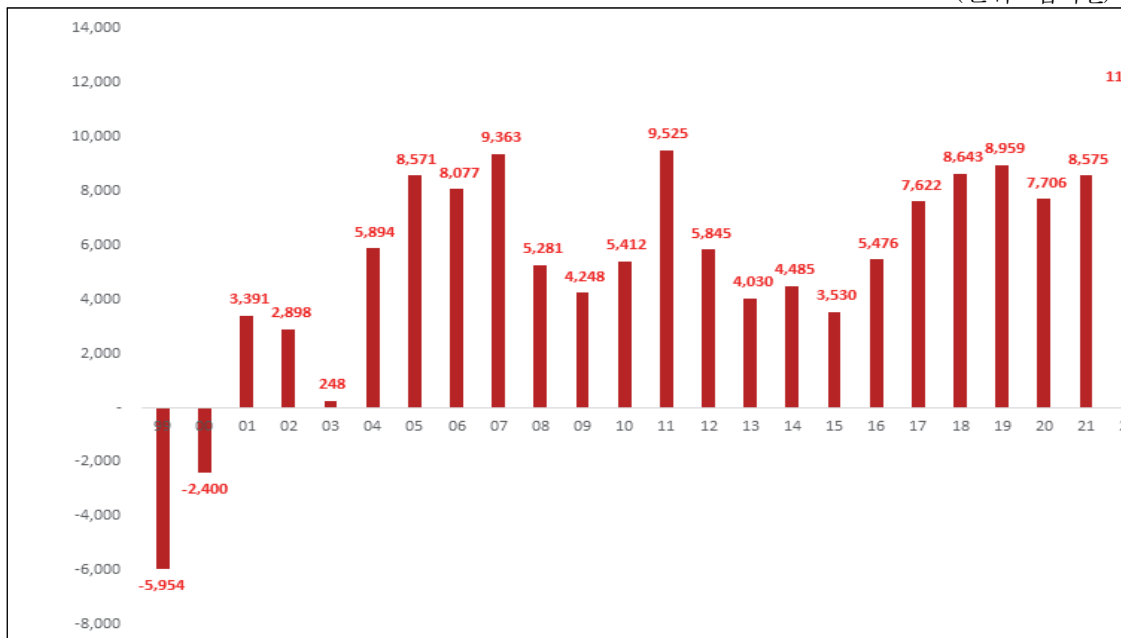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의거 산출.

주) 각 연도별로 존재했던 시중은행 대출금의 합계액.

- 금융화의 결과3: 이윤 극대화로 당기순이익 급증,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예대마진)’이 주요 수익원

[그림5]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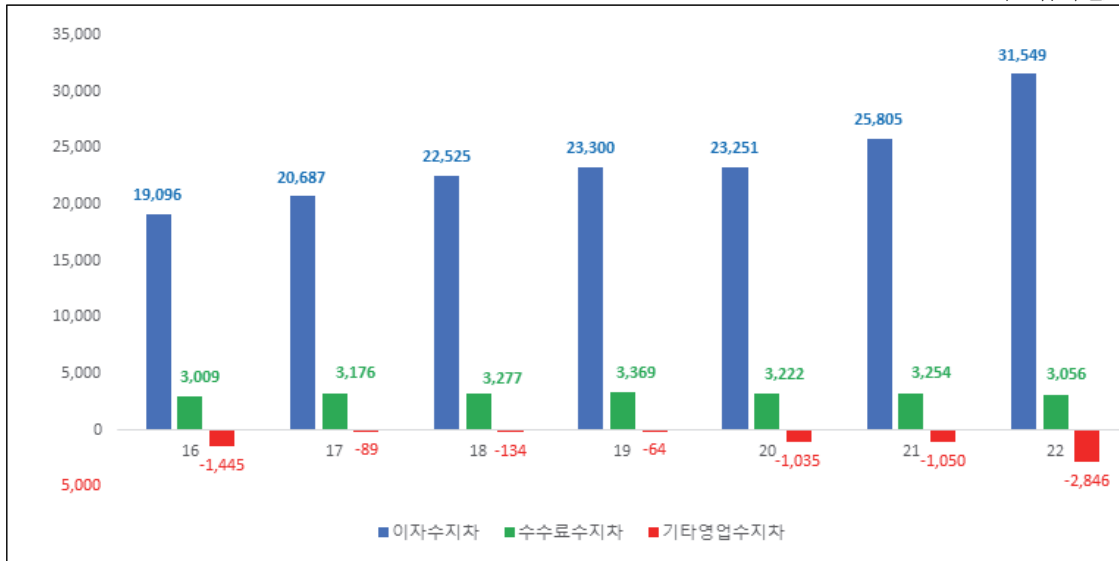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연도별로 존재했던 시중은행 당기순이익의 합계액.

[그림6] 시중은행 영업부문별 수치차 추이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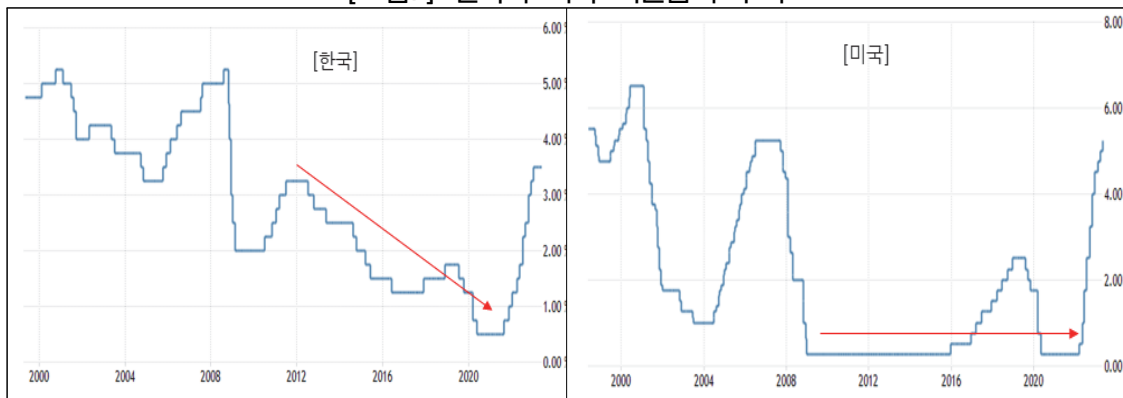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연도별로 존재했던 시중은행 부문별 수치차(수익-비용) 합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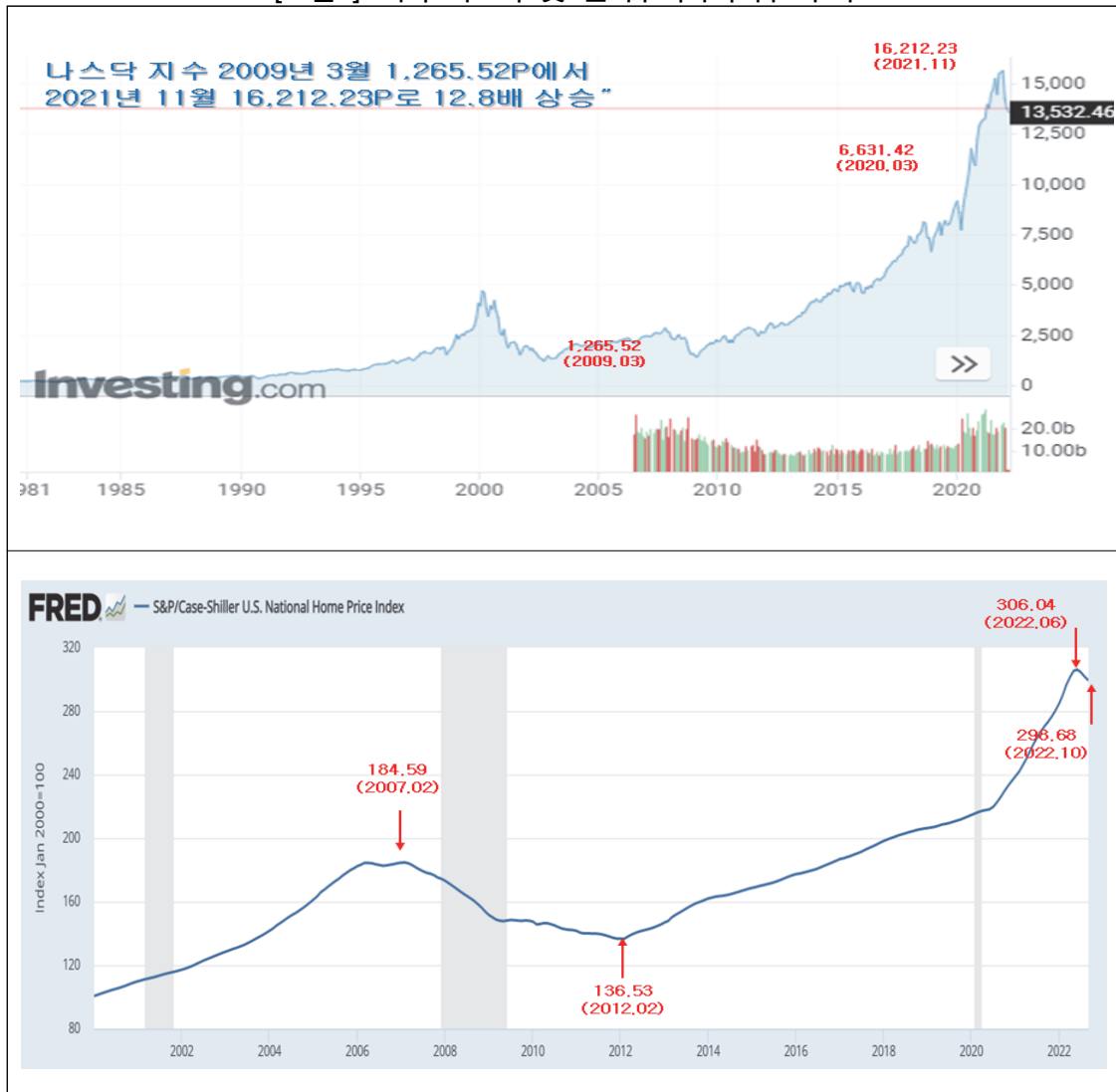
○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과잉유동성으로 자산버블 야기

[그림7]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단위: %)

[그림8] 미국 나스닥 및 전미주택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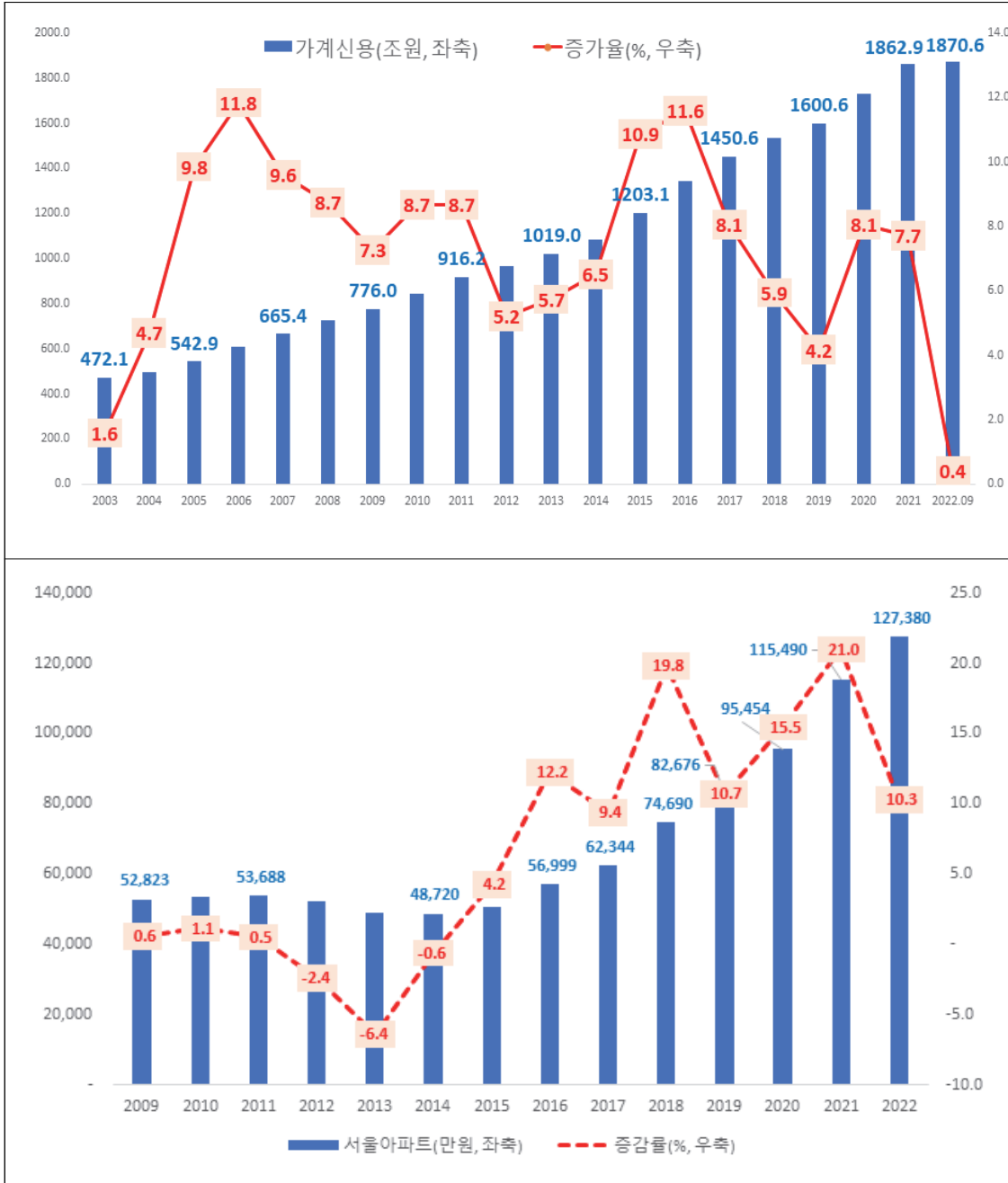


자료) Investion.com / ST, LOUIS FED

○ 한국 가계부채 2003~2021년 기간 중 연평균 7.6% 증가 (경제성장률은 3.4%)

[그림9] 우리나라 가계신용 및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추이

(단위: 조원, %, 만원)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및 KB부동산 통계

주1) 가계신용은 각 연도 12월말을 기준하여 전년대비 증감률을 산출.

주2)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당해연도 월별 매매가격을 연평균하여 증감률을 산출.

○ 은행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 단기적: 당기순이익 중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주주이익 한정제, 수익의 일정 몫을 금융소외자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
- 장기적: 은행업(간접금융시스템)의 소유·지배구조 개선<sup>9)</sup> 및 사회적 통제 강화<sup>10)</sup>

---

9) 미국의 경제학자 Fred Moseley는 “The US Economic Crisis ; Causes and Solutions, 2009”라는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은행국유화를 주장함. “정부와 대중 그리고 좌파적 입장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잔인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①일정한 방식으로 금융 자본가에게 구제 금융을 하는 것 ②보다 심각한 금융위기를 감내하는 것이라는 단지 두 가지 선택만 가능하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가 금융자본가들로부터 독립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정부 스스로가 경제주체들에게 주된 신용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즉 금융은 국유화되어 공공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Leo Panitch and Sam Gindin의 경우도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장과 사회적 심화는 금융혁신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분석하는 가운데 향후 금융을 공적기구로 전환하여 현재 금융에 주어진 그 본질적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며, 은행 국유화에 대한 요구는 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 대안의 필요를 구축하는데 있어 보다 발전적인 전략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Leo Panitch and Sam Gindin, 2009, “From Global Finance to the Nationalization of the Banks: Eight Theses on the Economic Crisis”, Global Research, February 25, 2009)

10) 김수행 교수는 은행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 차원에서의 신용관리위원회의 구축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함. “주기적 경기변동에 따라 신용의 공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은 주주예금자종업원차입자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신용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김수행. 2006, “위기와 자본주의 경제의 공황 제11장 1997년 한국경제의 위기와 공황”)

# 한국 사회 서민과 금융부채

서민금융진흥원 이효준 노동이사

## 서민금융진흥원 현황

(설립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9월 설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설립목적)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요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청년·대학생에게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

금융교육, 자영업컨설팅, 취업·복지연계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및 재기를 지원

(금융지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

(자금지원)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층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등에게 창업·운영자금과 생계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미소금융)

(보증지원) 저소득·저신용층 근로자 및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산형성지원) 저소득층(청년, 취약계층 등)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서민금융 지원 실적('22년)

22년 정책서민금융 건수는 **18.6% 증가한 73.3만건**, 금액은 **37.0% 증가한 7.3조원\* 지원**

\* 근로자햇살론(3.8조원), 햇살론15·안전망 대출II(1.4조원), 햇살론유스(0.3조원), 햇살론뱅크(1.2조원), 햇살론카드(0.03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0.1조원), 미소금융(0.3조원)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대출한도 한시 상향

\* 햇살론뱅크(20백만원→25백만원), 근로자햇살론(15백만원→20백만원), 햇살론15(14백만원→20백만원)

청년층에 대한 저축장려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 ('22.2.21~3.4)한 결과, **총 286.8만명 가입**

정책서민금융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특례보증 출시 ('22.9.29)하여, 3.4만명 1,002억원 지원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연장

\* 햇살론뱅크(20백만원→25백만원), 근로자햇살론(15백만원→20백만원), 햇살론15(14백만원→20백만원)

## 서민금융 동향

'23.2월말 기준 신용평점 보유자는 총 4,862.3만 명이며, 이 중 **신용평점 700점 미만인 자는 총 800.5만 명으로 전체의 16.5%** 차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은 총 1,179.4만 명이며, 이 중 신용평점 700점 미만인 자는 총 113.6만 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

**평균 신용평점은 전체가 814점, 청년층이 791점 수준**

'23.2월말 기준 연소득 4,500만원 미만인 자는 **총 3,925.5만 명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층 중 연소득 4,500만원 미만인 자는 총 1,098.6만 명으로 전체의 93.2%를 차지

**평균 추정소득은 전체 3,711.2만원, 청년층 2,880.3만원 수준**

주 : 1) 0점 및 신용평점 미산출자, 사망자 제외

2) 청년층은 만 19세~34세

자료 : KCB

## 서민금융 공급규모

### 저신용자 신용대출

‘22.3월~’ 23.2월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은 총 26.2조원, 총 280.9만 명 수준

은행의 신용대출 공급액은 전체의 13.5%인 3.5조원을 차지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액은 총 21.7조원, 230.6만 명으로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의 82.8% 차지

(단위 : 억원, 명)

구분	대출금액		대출인원	
	금액	비율	인원	비율
은행	35,492	13.5%	419,180	14.9%
상호금융	2,260	0.9%	13,105	0.5%
저축은행	143,302	54.6%	1,060,543	37.8%
대부업체	19,191	7.3%	237,294	8.4%
카드론	52,511	20.0%	994,731	35.4%
기타	9,653	3.7%	84,065	3.0%
합계	262,409	100.0%	2,808,918	100.0%

주 : 1) 신용대출 공급액 : 금융회사\* 개인신용대출\*\* 신규 이용금액  
 \* 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카드사, 보험사  
 \*\* 순수신용, 카드론  
 2) 저신용자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3) 비중 확인을 위해 중복제거 하지 않음  
 4) 신규공급액 기준  
 자료 : KCB

## 서민금융 공급규모

### 저소득자 신용대출

‘22.3월~’ 23.2월 중 추정소득 4,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은 총 51.5조원, 총 405.1만 명 수준

은행의 신용대출 공급액은 전체의 51.3%인 26.4조원을 차지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액은 총 22.3조원, 255.6만 명으로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의 43.4% 차지

(단위 : 억원, 명)

구분	대출금액		대출인원	
	금액	비율	인원	비율
은행	264,061	51.3%	1,284,359	31.7%
상호금융	18,340	3.6%	76,551	1.9%
저축은행	109,256	21.2%	868,118	21.4%
대부업체	15,298	3.0%	208,868	5.2%
카드론	80,482	15.6%	1,402,559	34.6%
기타	27,638	5.4%	210,484	5.2%
합계	515,075	100.0%	4,050,939	100.0%

주 : 1) 신용대출 공급액 : 금융회사\* 개인신용대출\*\* 신규 이용금액  
 \* 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카드사, 보험사  
 \*\* 순수신용, 카드론  
 2) 저소득자 : 추정소득 4,500만원 이하  
 3) 비중 확인을 위해 중복제거 하지 않음  
 4) 신규공급액 기준  
 자료 : KCB



## 서민금융 수요 추정

‘23.2월말 기준 서민금융 수요는 391.7만 명이며, 이 중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은 232.5만 명\*으로 초과수요 상태 확인

자금수요는 있지만 민간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금융 초과 수요 인원은 총 159.2만 명 ~ 226.5만 명 추정

서민금융 초과수요는 정책서민금융으로 보완하여야 하는 ‘최소 공급규모’이지만 ‘22.3월~’ 23.2월 중 서금원 자금공급 건수\*는 79.6만 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초과수요 상태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 서민금융 수요 추정

구분	구분	수식	결과
1	신용평점 700점 미만 자	-	8,005,132명
2	대출신청 경험 있다(1)	8,005,132명 × 30.8%	2,465,581명
	- 신청금액 모두 받았다	2,465,581명 × 67.0%	1,651,939명
	- 신청금액 일부만 받았다(2)	2,465,581명 × 27.3%	673,104명
	- 가절되어 받지 못했다(3)	2,465,581명 × 5.7%	140,538명
3	대출신청 경험 없다	8,014,300명 × 69.2%	5,539,551명
	-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5,539,551명 × 71.2%	3,944,161명
	- 신청해도 대출이 될 것 같지 않아서(4)	5,539,551명 × 18.1%	1,002,659명
	- 친인척, 지인을 통해 마련(5)	5,539,551명 × 8.1%	448,704명
	- 기타	5,539,551명 × 2.6%	144,028명
4	총 서민금융 수요	(1)+(4)+(5)	3,916,943명
5	서민금융 초과수요(6)	(3)+(4)+(5)	1,591,901명
		~ (2)+(3)+(4)+(5)	2,265,004명
6	서금원 정책서민금융 공급(7)	-	795,944명
8	정책서민금융 추가공급 필요	(6)-(7)	795,957명 1,469,060명

\* 주 : '22.3월~ '23.2월  
 자료 : KCB 자료 및 '2022년 서민금융정책 수요조사' 기반 직접 계산



한국의 불평등: 금융과 부채를 중심으로

# 정부 정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